

---

# 정책참고자료

---

2016-19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17개 시·도 지진대책 점검 실시	—————	4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 받아야	—————	6
3	기획재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	—————	11
4	교육부		
	유해 우레탄트랙, 전면 교체한다	—————	17
5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의 연구개발(R&D)기획·관리역량 획기적으로 개선	—————	23
6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 문화관광축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참석	—————	28
7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업선도고교 신입생 모집(홍천농고 포함)	—————	31

8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제2의 새마을운동' 으로 확산 \_\_\_\_\_ 35

9 고용노동부

민관이 힘을 합쳐 정시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시킨다 \_\_\_\_\_ 52

10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장 마련” \_\_\_\_\_ 91

11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 길 열려” \_\_\_\_\_ 82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R&D기반 최초 해양바이오 벤처기업 탄생 \_\_\_\_\_ 97

# 1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17개 시도 지진대책 점검 실시

- 9.12지진 이후 지자체별 지진대책 점검 및 중앙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

- 국민안전처는 9월 30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7개 시도 재난안전 실장이 참석하는 지자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9.12일 경주 지진 발생 후 1차 점검회의를 개최(9.23일)한 이후에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 국민안전처는 9.12 지진 이후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 중에 있으며, 경주 등 피해지역의 응급조치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 \* 시설피해 신고 9,368건 중 응급조치 9,179건 완료(98.0%, 9.30일 06:00기준)  
- 사유시설 : 97.9%(8,915건 중 8,726건 완료), 공공시설 : 100%(453건)  
\* 9.29일까지 누적기준 인력 13,026명, 장비 96대 동원
- 9.28일에도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에서도 상황근무체계 강화 등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 또한 국민안전처는 그간의 지진방재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민간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으며, 이번회의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해 줄 것과 우선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 지자체별 대국민 지진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지진대피 매뉴얼 점검 및 지진대피 장소(공터, 공원, 학교 운동장 등) 지정 등을 확인하는 한편,
- 이재민 구호물자의 충분한 확보와 동원체계를 점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진 대피 훈련 실시 등 단기적으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경북, 울산, 경주지역의 지진발생에 따른 대응, 복구 대책들을 청취하고, 타 시도에서 마련한 지진방재 대책들을 서로 공유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지자체별 지진대책 추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면서 지진대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 2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임직원,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 받아야 오늘(30일)부터 '권익위법' 개정안 시행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반드시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도 강화되어 재직 중 저지른 부패행위로 인해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은 공직자도 취업제한의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및 시행령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 시행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공직자나 승진자 등에게는 반드시 대면(對面)교육을 해야 하며, 권익위는 교육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또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강화되어 기존에는 공직자가 징계로 퇴직한 경우에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인하여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기관도 확대되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

체 등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10억원.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만 취업 제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취업제한 기관의 규모 및 범위))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권익위는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권익위의 해임 요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공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권익위는 정부 3.0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 권익위 관계자는 “늘어나는 부패방지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렴연수원을 통한 맞춤형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다른 부처 교육 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부패방지 교육이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패방지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최근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이나 고질적인 부패관행의 고리를 끊는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1. 개정 경과

- 부패방지권익위법 국회 본회의 의결('16.3.3)
-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16.3.29)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16.9.20) 및 시행('16.9.30)

## 2. 청렴교육 의무화 관련 개정사항

### □ 청렴교육의 실시 횟수 및 최소 이수시간

- 매년 1회,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 실시의무 부과

### □ 청렴교육의 내용

-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 사항,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 □ 청렴교육의 방법

- 강의식 대면(對面)교육, 시청각 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대면교육 실시를 의무화

### □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시기 및 점검 방법

-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권익위로 제출
- 권익위는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 병행
-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 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 지원 가능

###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현황

#### □ 적용대상

-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백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기관

- 업무와 관련 없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업무와 관련된 모든 영리사기업체,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 ※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과 업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

#### □ 취업제한 기간

- 퇴직일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 □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권익위) 재취업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해임 조치 요구
  - ※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 조치 요구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위반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및 위반자 현황

- 비위면직자 발생 현황

구 분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1,846	407	408	321	390	320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현황

구 분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취업제한 위반자	56	12	10	6	14	14
· 공공기관 취업자	53	12	9	6	14	12
· 영리사기업체 취업자	3	-	1	-	-	2

## <참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비교

구 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주무부처 (근거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권익위법)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li> <li>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 공직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등록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무직 공무원</li> <li>4급 이상 일반직·지방·별정직공무원</li> <li>법관, 검사, 헌법연구관</li> <li>대령 이상 장교 및 2급이상 군무원</li> <li>총장·학교장, 교육감·교육장</li> <li>총경 이상, 소방정 이상 공무원</li> <li>공기업·공직유관단체 임원</li> <li>권익위(부방국), 감사원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li> <li>감사·회계, 인·허가,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 등</li> </ul> </li> </ul>
취업제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li> <li>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li> <li>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제한</li> </ul>
취업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li> <li>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기관(규모, 매출액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리사기업체</li> <li>법무·회계·세무법인</li> <li>학교·의료·사회복지법인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직 전 5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금 10억, 연매출 100억이상 영리사기업체</li> <li>연매출 100억이상 법무·회계법인</li> <li>연매출 50억이상 세무법인</li> <li>학교법인·의료법인</li> <li>연매출 100억이상 사회복지법인 등</li> </ul> </li> </ul>
취업심사·승인제도	없음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칙)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로 판단</li> <li>(예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기관의 업무로 판단</li> </ul>	
위반자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 배경 및 기본방향 》

-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

\* 고용률('15년) : 중장년(30~64세) 74.3% vs. 청년(15~29세) 41.5%

실업률('15년) : 중장년(30~64세) 2.6% vs. 청년(15~29세) 9.2%

\*\* 고용률(15~64세,'15년) : 男 75.7% vs. 女 55.7% / 실업률 : 男 3.8% vs. 女 3.7%

- 구조개혁 지연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혀 있고,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정책 실효성·체감도가 저조
-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
-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

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 담당

⇒ "4만명 취업연계·지원 + 2~3만명 추가혜택" 효과 기대

##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 1.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 ⇒ 일자리 중개인 역할

① (**청년 채용의 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준별로 기업 구인 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

-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

② (**분야별 채용행사**)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

\* (예) (에너지) 소규모 전력거래 허용 / 전력거래중개사 /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 (70명, 10월)  
(관광)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 / 호텔리어 / 관광산업 채용박람회(300명, 9월)

③ (**고용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을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확산\*

\* '16년중 16개 대기업, 17개 공공기관에서 총 9,400여명 추진 계획

④ (**사회맞춤형 학과**)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

\* [대학] 각종 산학협력 재정사업 대상선정시 우대, [기업] 투자비 세액공제(2~25%)

\*\* 참여 학생 수 : ('15년) 7,421명 → ('17년) 1.5만명 → ('20년) 2.5만명

## 2.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① **(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가칭 ‘청년취업 내일공제’, ‘16년 1만명)

\*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16년 1만명 지원)

②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

-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이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

##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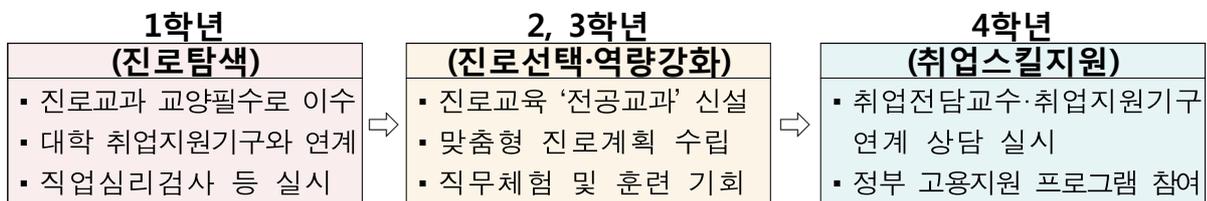
⇒ 청년의 조기입직 지원

①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

-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16년)에 진로·취업 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

-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진로·취업지원 운영모델(案)



-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보급 후 확산

-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

②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5월)

\*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 (891개소 선정) → 채용 정보 제공 등 실질적 관리

**4.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

① (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구축)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확충('16년)

-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 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

② (원스톱 맞춤형 지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전달기관	대상	기관별 특화서비스	비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청년	▸ 지역기반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기획 ▸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17개소
대학별 취업지원기구*	대학생	▸ 대학내 고용지원 기능 연계·통합을 통한 원스톱 고용지원	'16년 140개소
새일센터	여성	▸ 경력단절 여성 복귀 지원	147개소
고용복지+센터	일반	▸ 취업지원, 실업지원 등 종합 고용복지서비스 제공	현 40개소 ('17년 100개소) *
청년희망재단	청년	▸ 정부정책 사각지대 보완	

대학창조일자리센터('16년 41개소), 대학 취업처·인재개발원 등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① (경력단절 예방)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원 → 월30만원)

-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포함 등

②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

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

-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

\* 야간 전담 간호사 건강보험 수가 인상('16.8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16.5월), 요양시설 인력규정 개정('16.7월) 등을 통해 4,200여개 일자리 발굴

- ③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 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추진

- ④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발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제고\*

\* [현행]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

→ [개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관 역할분담 방안 논의

## 《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요 》

- ① 일 시 : '16.4.27일(수) 10:00~11:00
- ② 장 소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
- ③ 목 적 : 관계기관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 ④ 토론안건 :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청년 채용의 날 활성화, 여성창업 지원 내실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방안
- ⑤ 참석자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청년위원회 위원장,  
교육부 차관, 중소기업청장,  
청년구직자 2명, 여성창업가 1명,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배석 : 광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광주 고용복지+센터 소장, 상명대 대학창업일자리센터장

## 유해 우레탄트랙, 전면 교체한다.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등 확정
- (우레탄트랙) KS 기준 재설정, 새로운 기준 따라 공공체육시설·공원 등까지 전수조사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취약근로자 보호 등 실천 강화

□ 정부는 '16.9.30(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자 : 문체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장관, 기재부·교육부·행자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해수부·안전처 차관, 중기청장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주요 개선사항은 아래와 같다.

### <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 >

□ 얼마전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됨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문제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안전기준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 초·중·고 11,690개교중 2,763개교에 우레탄트랙 설치, 이중 1,767개교 기준 초과(16.6, 교육부)

○ 첫째, 현행 우레탄트랙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여 안전성을 강화한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 둘째,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우레탄트랙을 모두 조사하여 새로운 KS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전면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학교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하)를 추진하고, △나머지 우레탄트랙은 새로운 KS기준으로 전수조사한후 교체를 추진(교육부, '17~)한다.

-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새로운 KS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시설은 모두 교체('17~)할 계획이다.

\* 종합운동장·축구장 등 982개 / 도시공원·하천변·아파트단지 등 19,335개

- (어린이 놀이시설) 기존 법령에 규정된 설치검사, 2년단위 정기검사 과정을 통해 문제시설을 신속히 교체(안전처·교육부·지자체, '17)해 나간다.

\* 어린이집·유치원 등 총 67,522개중 19,335개소에 설치

○ 셋째, 현장 시료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시설 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 (현행) 준공검사시 업체가 제출한 제품으로 검사 → (개선) 현장 시료 채취·검사

##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고용 추진상황 >

□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16.3.10)에서 확정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 그동안의 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력운영이 확대되는 등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수사례 : 붙임 4)

○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기간제·사내하도급 보호 가이드라인('16.4)', 비정규직 차별 유무 점검 의무화 등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 ('16.1) 72천개 협력업체, 누적 운용금액 24조원 → ('16.8) 103천개, 66조원

\*\* 협력업체에 지원한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규모(억원) : ('15) 4.2 → ('16.8) 28.1

\*\*\* 비정규직 차별 시정조치 : ('15) 772명, 504백만원 지급 → ('16.9) 1,169명, 1,245백만원

□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을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2·3차 협력업체도 상생결제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현재 대기업 및 1차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중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하청근로자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원청 기업의 근로복지기금 범위를 확대('16.12)하기로 하였다.
-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특성에 맞는 비정규직 정책목표·성과지표(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 능력중심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한 성과평가 모델을 제시('16.9)하고, 직종별 임금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사무관리직 등 임금정보 공표('16.8~, 매월) / 100인이상 사업장 인력운용 실태조사 발표('16.12)

### < 국가정책조정회의 관련 >

-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취임('15.6) 이후 총 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39건의 안건을 상정·논의하여,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 정책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왔다.

#### <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성과 >

구 분	주요 안건
국정현안 대응 (15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공항보안 강화대책('16.3) △공장신증설·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15.7) 등
국민안전 강화 (9건)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16.4) △당류저감 종합대책('16.4) △뉘시어선 안전관리 대책('15.10) 등
국민·소비자·근로자 보호 (7건)	△4대악 근절 대책('15.1, '16.1, '16.7)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16.4)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지원대책('15.10) 등
핵심개혁과제 (8건)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15.12) △기술금융 제도 개선방안('16.4)

- 우레탄트랙은 2002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시설에 설치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 운동장 등의 우레탄트랙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
  -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2,763개교)를 대상으로 KS기준('12.12)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학교(1,767개, 64%)에서 유해물질(납)이 기준치를 초과
    - \* 학교체육시설 우레탄트랙 KS기준 (mg/kg)  
: 납(Pb) 90 / 카드뮴(Cd) 50 / 6가크롬(Cr<sup>6+</sup>) 25 / 수은(Hg) 25
  - 우레탄트랙은 학교뿐만 아니라 체육시설·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에도 설치되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유해 우레탄트랙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

< 우레탄트랙 설치 현황 >

구 분	설치 시설 수
학교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11,690개교 중 2,763개교(24%)에 설치
공공체육시설	종합운동장, 축구장 등 21,317개소 중 982개소(4.6%)에 설치
지자체 시설	도시공원(14,653개), 하천변(3,838개) 등 총 18,491개소 설치 (추정)
어린이 놀이시설	유치원·어린이집 등 67,522개소 중 19,335개소(27%)에 설치

-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우레탄트랙 위해성 관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유해물질 관리 기준 재정비

□ 먼저, 우레탄트랙의 안전 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비

- '유럽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여 현행 KS기준의 유해물질 관리대상(중금속 4종)을 확대\*(국가기술표준원, '16.12)하고, 공공체육시설 등 학교 이외의 시설에도 강화된 KS기준을 적용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 중금속 4종 + 비소·아연 등 중금속 15종 및 프탈레이트 6종

- 이와 함께 강화된 KS기준 등을 반영한 위해성 평가를 토대로 유해 우레탄트랙에 대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해성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환경부, '17.1)

\* KS기준 개정 검토항목으로 우레탄트랙 이용행태, 인체영향(위해도) 등을 평가하여 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우선 교체

## 2. 유해 우레탄트랙 교체

□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레탄트랙을 조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전면 교체 실시

- ① (학교) 기존 전수조사('16.3~6)에서 현행 KS기준을 초과한 시설중 마사토로 교체를 희망하는 학교는 우선 교체('16.하~)하며, 우레탄트랙으로 교체할 경우 강화된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교체

교체 대상	우레탄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1,745	901 (51.6%)	753 (43.2%)	86 (4.9%)	5 (0.3%)

\* 기준 초과된 1,767개소 중 22개소는 학교 이전 등으로 제외

- 기존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학교도 정비된 기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교체 추진

- ② (공공체육시설 및 지자체 시설) 정비된 유해물질 관리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은 신속히 교체

\* 단, 공공체육시설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 ('16.7~10)으로 현행 기준 초과 시설은 새로 정비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17년 우선교체 추진

③ (어린이 놀이시설) 현행 설치검사와 2년단위 정기검사를 통해 유해성을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각 교체하는 한편,

- 강화된 KS기준 및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 기준\*'의 재정비를 검토

\* (현재)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 화합물 총합 0.1% 이하, 폼알데이드 방산량 75mg/kg 이하

### 3. 설치 및 유지관리 강화

□ 우레탄트랙 설치 단계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를 내실화하고,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통해 사후관리도 강화

○ 그동안 일부 시설의 경우 준공검사시 트랙손상 등을 우려하여 업체가 제공한 제품으로 검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장의 시료 채취 검사를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

○ 또한 우레탄트랙 내구연한(9~10년)과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개·보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

## ‘지역의 연구개발(R&D) 기획·관리역량 획기적으로 개선’

- 제13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 안건 의결 -

□ 정부는 9월 30일(금), 제13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위원장 : 윤현기)를 개최하여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을 심의·확정한다.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조정기구로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

○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지역혁신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기획·관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17개 시도에 설치된 최상위 과학기술정책심의기구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역실정에 맞게 격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조정·평가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또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정부 R&D예산배분\*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자부 주관)\*\*와 연계하여 지방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활발히 작동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지역의 신규 R&D 사업에 대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조정 여부를 검토

\*\* 평가지표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실적’을 포함하고 가중치도 확대

○ 둘째, 지방 R&D 기획·관리 전담 조직 설치를 유도하여 지방과학기술 Think-tank로 육성하고, 지방 R&D 기획·관리 역량 제고 시범사업\* 신설 등 지역주도형 R&D 사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별 지방과학기술진흥관련 사업기획, 공모를 추진하여 평가를 통해 4~5개 내외 지역을 선정 및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

- 아울러, 지자체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 실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도 제고 할 계획이다.

○ 셋째, 지역별 맞춤형 R&D 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투자전략 모델을 제시하고 지방 R&D 조사·분석·활용체계를 개편\*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 조사·분석 주체, 시기, 방법, 절차 및 검증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 기반의 온라인화로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넷째, 17개 전국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공무원 대상 정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 및 전파를 촉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윤현주 과학기술정책관은 “이번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의 R&D 기획·관리역량이 제고되면 지역혁신이 촉발되어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붙임1 :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요약)

붙임2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개요

## □ 실천 과제

## [과제1] 지방 R&amp;D 컨트롤타워 역할(기능)강화

- 현재 지자체 추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를 중앙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개편**하고
  - \* 지방 R&D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 마련
-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예산 배분·조정(안)’에 지방 R&D 투자방향 제시 등 지방 R&D 정책 기획·심의 기능 강화
- **지역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요 지방과학기술정책(사업)에 대한 심의·조정·평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위원회 위원장을 격상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주요 R&D 사업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추진(유도)
- (가칭)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지방협의회 정책발굴 및 지역 혁신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지원을 강화
  - 지자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과 지역R&D전문기관과 교류·협력 강화 등 지역혁신정책의 Think-tank 역할도 함께 수행

## [과제2]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추진역량(기반) 강화

- 지방 R&D 기획·관리 전담조직 설치 유도
  - 단기적으로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R&D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전담 설립을 유도
- 지자체 주도로 기획·시행하는 시범사업 도입 등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지역별 지방과학기술진흥관련 사업기획, 공모 등 4~5개 내외 지역을 선정 및 예산을 지원하는 공모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자부 주관)**에 과학기술진흥분야 지표를 지역R&D 기획·관리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개선하고 **가중치도 확대하여 과학기술진흥정책에 대한 지자체 관심을 제고**

- 지자체 과학기술분야 공무원을 대상 전문교육 실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공무원 상호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전문성 확보 지원

### [과제3] 지역맞춤형 R&D 전략 수립 지원

- 지자체 스스로 지역별 과학기술 생태계 환경에 맞는 전략적R&D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수준진단 및 맞춤형 투자전략 모델 제시
  - 지역 혁신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R&D 혁신 영역에서 전문화 할 수 있는 분야 제시 등
-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 기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방 R&D 분야 주요 통계자료 조사·분석체계 개편 추진
  - 조사·분석 주제, 시기, 방법, 절차 및 검증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정보시스템 기반의 온라인화로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 [과제4] 중앙-지방 간 연계·협력 강화

- 17개 지자체의 지역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우수 사례 공유 및 전파 촉진
- 지자체 과학기술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앙-지역 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 연계·협력 강화
  - \*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역혁신 거점 기관도 함께 참석하여 지방의 과학기술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요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10
- (주요 기능)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과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17개 지자체 추천 민간위원(18명) \* 위원장은 위원 중 미래부 장관이 지명

< 지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로 미래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문체부 장관, 문화관광축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방문

- 문화가 담긴 지역축제 육성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의지 밝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윤선 장관은 10월 2일(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는 ‘제13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10. 1.~3. 이하 자라섬축제)에 방문해 문화관광축제의 발전 사례를 살펴보고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인재진 대표(축제 총감독) 등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지난 2004년 시작된 자라섬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재즈음악 축제로서, 무형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축제의 소재로 활용하여 여름 관광지에 머물던 가평지역에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등 창의적 지역관광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손꼽혀 왔으며, 2016년에는 ‘문화관광축제’ 최고 등급인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 \* 문화관광축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흥미 있는 축제콘텐츠로 활용한 관광 관점에서 특색 있고 우수한 축제를 매년 40여 개 지정하여 지원
  - 선정등급(2016년): 대표(3개), 최우수(7개), 우수(10개), 유망(23개)

### ‘프랑스 포커스 리셉션’ 참석, 축제 참가 해외연주자 등 격려

한편, 올해 자라섬축제에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인증 행사인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프랑스 재즈솔레포미에\*(JSLP) 축제’ 간 교류 행사로 앙리 텍시에(Henri Taxier Hope Quartet) 등 프랑스 재즈아티스트 6개 팀이 참여하는 ‘프랑스 포커스’가 진행된다.

- \* 재즈솔레포미에(Jazz Sous Les Pommiers): 프랑스 노르망디의 인구 2만 명 소도시 쿠탕스에서 개최되는 프랑스 3대 재즈 축제의 하나

조윤선 장관은 이날 자라섬축제 현장에서 열린 프랑스 재즈아티스트 등 해외 인사 환영 행사인 '프랑스 포커스 리셉션'에도 참석해, 파비아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와 최준호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 예술감독 등과 양국 간 문화교류와 우의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서 조윤선 장관은 축제가 열리는 자라섬 현장을 둘러보며 축제를 찾은 캠핑 관광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한편, 축제의 주 공연인 리투아니아 재즈밴드 '다이니우스 플라우스카스 그룹'의 공연을 관람하고 가평군 관계자 및 축제 사무국과 자원봉사자 등 운영진들을 격려한다.

조윤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은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 위주의 페스티벌이 아닌 음악과 자연의 조화, 레포츠와 휴식이 함께하는 진정한 축제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평가하며, "자라섬이 문화예술에 바탕을 둔 관광산업 진흥이라는 패러다임과 모델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새로운 융·복합 관광 자원을 발굴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과 고용 확대에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조윤선 장관은 지난 9월 5일(월) 취임 이래 국내 관광을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관광콘텐츠의 확보를 비롯한 질적 성장이 필요함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평창올림픽 지역 방문(9. 9.)과 경기 북부지역 예술·안보 관광지 점검(9. 16.) 등 관광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해 오고 있다.

붙임 '제13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개요 및 메인공연 소개

별첨 사진 보도자료 행사당일 배포 예정

**□ 개 요**

- 기 간: 2016. 10. 1.(토) ~ 10. 3.(월) / 3일간
- 장 소: 경기도 가평 자라섬 및 가평읍내 일원
- 주최/주관 : 가평군 / (사)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 축제연혁**

- 2004년 제1회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개최
- 2008~2010년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유망> 축제
- 2011~2013년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우수> 축제
- 2013. 2. 28.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회 특별상
- 2014~2015년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최우수> 축제
- 2016년 문체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대표> 축제

**□ 주요 프로그램**

- 공연 프로그램 (총 48개 팀 : 국내 22팀, 해외 26팀 / 25개국)
- 가평 관련 프로그램(축제 기간 내 진행)
  - 올나잇 시네마, 팜마켓, 팜파티, 페스티벌 기념음료, 음악감상회, 가평빌리지
- 공연 외 프로그램
  - 프랑스 포커스, 자라섬 재즈 콩쿨, 찾아가는 자라섬 재즈

**□ 축제 일정 [10. 2.(일) ]**

행사장소	10.2(일)	
재즈	16:30~17:20	다이니우스 플라우스카스 그룹(Dainius Pulauskas Group)
아일랜드 (*메인 프로그램)	17:40~18:30	앙리 텍시에 호크 콰텟(Henri Texier Hope Quartet)
	18:50~19:40	스패니쉬 할렘 오케스트라(Spanish Harlem Orchestra)
	20:00~21:00	마누 카체(Manu Katche)
파티 스테이지	21:20~22:10	스텔라 모멘츠(Stella Moments)
	22:30~23:20	라 카라반 파스(La Caravane Passe)
페스티벌 라운지 (자라섬 캠핑장내)	12:30~13:20	에카킴 보일스톤 재즈(Ekah Kim Boylston Jass)
	13:30~14:20	다니엘 칼손 트리오(Daniel Karlsson Trio)
	14:30~15:20	재즈파크빅밴드(Jasspark Bigband)
	15:30~16:20	샬로쉬(Shalosh)
재즈 팔레트 (가평읍 사무소앞)	12:30~13:20	한양대 재즈 빅밴드(Hanyang Uni. Jazz Bigband)
	13:30~14:20	진수킴 펜타플(Jin Soo Kim Pentaful)
	14:30~15:20	유니지아 최 트리오(Eugenia Choe Trio)
	15:30~16:20	윽 반 라인 트리오(Joep van Rhijn Trio)
재즈큐브 (가평읍 사무소앞)	21:30~22:20	키모 포요넨(Kimmo Pohjonen)
	22:30~23:20	세움(SE:UM)
	23:30~00:20	이아람-조스미에니엘 '우드&스틸'(Aram Lee - Joce Mienniel)

## 첨단스마트 농업시대, 유능한 농업인의 꿈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에서 이루세요!

- 창조농업선도고교 신입생 모집-

### 《 주 요 내 용 》

- ◆ '17년 3월에 개교하는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 (창조농고) 보은자영고, 호남원예고, 홍천농고 입학 전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창조농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가 '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창조농업선도고교는 현장실습 중심의 농업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졸업 후 실제 영농에 종사할 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업고등학교다.

\* [창조농고] 보은자영고등학교, 호남원예고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 교육과정은 전체 이수단위(204단위)의 70%를 전문교과 내용으로 구성(실습학년제\* 포함)하고, 전문교과는 실험·실습 비중 70% 이상으로 개편 운영되며,

\* 실습학년제란? : 주 단위로 3일은 현장(농가) 인턴십 + 2일은 교내 교육으로 운영하는 도제식 교육과정임

- 현장 체험프로그램, 방학기간을 활용한 해외연수, 영농창업 전문교육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전공분야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과 우수학생 해외연수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농식품부 관련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 (보은자영고) 충북 보은자영고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 모집학과는 채소경영과, 과수경영과, 화훼경영과, 특용원예과 4개 과로 총 80명을 선발한다.
  - 선발기준은 내신성적, 출석·봉사 점수와 농업관련 자격증 및 면접 등을 통한 영농의지(배점 비율 40%) 평가이며, 별도의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호남원예고) 전남 호남원예고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원예과 신입생을 모집한다.

- 모집인원은 총 90명으로 시험없이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선발하고,
- 전형분야를 크게 농협 추천 인재, 가업 승계 인재, 그리고 창조 농업 인재 3분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홍천농고) 강원도 홍천농고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 모집학과는 원예과와 동물자원과로 총 80명을 선발한다.
- 전형방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면접은 다시 1단계 면접(영농/창업계획, 자기소개)과, 2단계 심층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영농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 농식품 관계자는 이번 신입생 모집은 지역제한이 없는 전국 단위 모집이며, 뚜렷한 영농의지가 선발시 많이 반영되는 만큼 앞으로 농산업분야에 적성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전문기술·경영교육을 통해 유능한 미래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규모 : 전국 농업계 고교 3개
- 지원 분야/단위 : 원예·축산 특화/학교 단위
- 예산 : ('16) 학교당 개교준비금 20억원, ('17 이후) 운영비 매년 지원  
\* '17년 이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운영방안**

- 학생선발 : 전국단위, 학생 영농의지·부모 영농기반 중심
  - 학급당 학생 수 : 20명 내외(실제 실습 교육시 10명 내외 분반 운영)
- 교장·교원 확보 : 개방형 학교장 공모제 시행, 산학겸임교원 적극 활용
- 교육과정
  - 전문교과 비중 70% 수준(보통교과 일부, 자율과정, 창의적체험활동 과목도 실질적으로 전문교과 관련 과목으로 운영), 전문교과 중 실습 비중 70% 이상
  - 3학년 실습학년제 운영(주 단위로 3일은 현장 인턴십, 2일은 교내 교육)
  - 방학기간 해외 전문기관 연수(우수학생),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 학생혜택 : 등록금 면제, 전원 기숙사 생활, 학교 프로그램자부담 면제(현장실습, 해외 연수 등)

**□ 졸업생 진로 : 창업 100% 목표(승계 포함)**

\* 진학은 농업전문대(한농대, 천안연암대, 여주경영전문대)에 진학토록 지도

**□ 선정/관리 방안 : 전국 대상 공모/5년마다 재지정 평가****□ 향후 추진계획**

- 공모('16.1월) → 사업자 선정('16.4월) → 운영준비('16.4~'17.2월) → 운영('17.3월)

##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

- ◇ 조경규 환경부 장관,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현장 방문
-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민·관 협력이 성공열쇠임을 강조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9월 29일 오후 4시에 충남 아산시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현장을 방문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제2의 새마을운동'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2015년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아산시 환경기초시설(소각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이 밀집된 아산환경과학공원 일원(배미동, 수장리)에 조성 중에 있다.
- 이날 복기왕 아산시장은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아산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소각장의 남은 열을 활용한 '기업세탁 공장'과 가축분뇨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발전 폐열을 활용한 '곤충 및 파프리카 생산' 온실 설치를 통해 연간 9억 8,000만원의 주민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 또한 아산환경과학공원, 장영실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환경과 에너지분야의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 조경규 장관은 기업세탁공장 조성 현장에 나온 주민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살리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민·관 협력이 성공열쇠임”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주민대표인 강일 위원장은 “지금까지 환경부와 아산시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향후 세탁공장 완공 후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환경부, 아산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 조경규 장관은 “2018년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10곳을 추가로 조성하여 국내 확산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과 장비를 중국 등 개도국에도 수출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국내·외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5년 선정 5곳(아산, 청주, 영천, 경주, 양산) : 2017년 말 준공

\* 2016년 선정 5곳(인제, 음성, 보령, 완주, 제주) : 2018년 말 준공

- 붙임 1. 2015년 선정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내용.  
2. ‘홍천’ 시범사업 성과.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붙임 1>

## 2015년 선정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내용

### 가. 충청북도 청주시

#### □ 주요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폐자원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및 발전폐열(온수) 활용 공급배관 설치(5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폐수 바이오가스(8,300m<sup>3</sup>/일) 발전시설(760kW) 설치 → 발전폐열 공급배관 연결 → 주변 마을(신대동, 가락4리) 공급</li> <li>* 민간투자(22억원), 주민참여(1.4억원) 포함</li> </ul> </li> <li>◆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온수) 활용 온실 및 건조장 설치(1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평 규모 온실 2개소에 발전폐열 공급 → 체험형 농장 운영</li> <li>* 주민참여(0.4억원) : 토지·기존 건축물 현물 및 내부 설비 투자</li> <li>○ 150평 규모 농작물 건조장 3개소에 발전폐열 공급</li> <li>* 주민참여(5.5억원) : 현물(토지·건축물) 및 내부 설비 투자</li> </ul> </li> </ul>
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회관 옥상(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0.4억원)</li> </ul>
예상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가스 발전으로 매전수익 : 8.7억원/년</li> <li>◆ 139가구 연료 전환에 따른 난방비 절감 : 1.1억원/년(81만원/가구/년)</li> <li>◆ 발전폐열 활용 통한 농산물 판매수익 : 2.8억원</li> <li>◆ 태양광 발전으로 마을회관 전력비 절감 : 0.1억원/년</li> </ul>

#### □ 세부 사업내역

(금액단위: 억원)

사업명	국비	지방	주민투자	민자	합계
바이오가스 발전기시설 및 공급배관 설치	16.8	16.8	1.4	22	57
발전폐열 활용 온실 설치	1.7	1.7	0.9		4.3
발전폐열 활용 건조장 설치	1.1	1.1	5.5		7.7
태양광 발전	0.2	0.2			0.4
설계비 등	5.2	5.2			10.4
계	25	25	7.8	22	79.8



# 청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명세

- 1 발전 및 폐열(온수)공급
- 2 온실
- 3 건조장
- 4 태양광발전



발전시설



온실



온실방울토마토재배



태양광 발전



건조장

## 나. 충청남도 아산시

### □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폐자원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 여열 활용 세탁공장(사회적 기업) 설치(20.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 폐열(90Mcal/h) → 소각 폐열 공급배관 → 세탁공장 공급</li> <li>* 주민참여(3.5억원) : 토지 현물 및 세탁설비 투자</li> </ul> </li> <li>◆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온수) 활용 곤충 사육용 유리온실(14.7억원) 및 파프리카 재배용 유리온실(11.2억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평 규모 곤충바이오 사업용 유리온실 설치 → 아산환경과학공원 내 생태곤충원·일반인 판매</li> <li>- 600평 규모 파프리카 재배용 유리온실 설치</li> <li>* 주민참여(2.3억원) : 토지 현물 및 내부설비 투자</li> </ul> </li> </ul>
문화/관광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영실과학관·생태곤충원·아산환경과학공원 연계 복합 테마공원 조성(1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시설 전망타워와 생태곤충원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li> </ul> </li> </ul>
예상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세탁공장 운영 수익 : 3.6억원/년</li> <li>◆ 곤충바이오 유리온실 운영 수익 : 3.4억원/년</li> <li>◆ 파프리카 재배용 유리온실 운영 수익 : 2.8억원/년</li> <li>◆ 테마·생태공원 조성 입장료 수익 : 1.6억원/년(지자체 수익)</li> </ul>

### □ 세부 사업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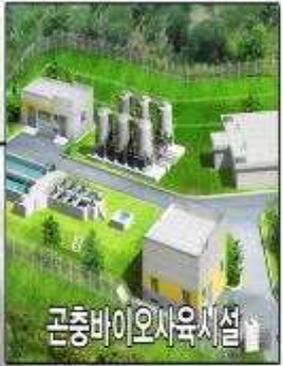
(단위: 억원)

사업명	국비	지방	주민투자	기타	합계
소각폐열 활용 세탁공장 설치	8.5	8.5	3.5		20.5
곤충바이오 유리온실 설치	6.7	6.7	1.3		14.7
파프리카 재배 유리온실 설치	5.1	5.1	1.0		11.2
복합 테마공원(생태습지 등) 조성	5.3	5.3			10.6
계	25.6	25.6	5.8		57.0

#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목적

- 1 기업세탁
- 2 곤충바이오사육시설
- 3 파프리카농장
- 4 테마공원조성
- 5 환경과학공원개선



곤충바이오사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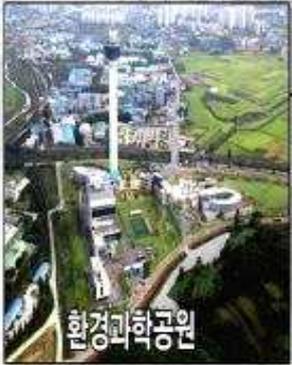
파프리카 농장



기업세탁



테마공원조성



환경과학공원



환경과학공원개선

## 다. 경상북도 경주시

### □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폐자원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 발전 폐열 공급배관 설치(6억원, 0.5k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폐열 발전시설(4,750kW) → 발전기 폐열 공급배관 → 다목적캠핑장·친환경사랑방·온실에 공급</li> </ul> </li> <li>◆ 소각 발전 폐열 활용 다목적 캠핑장 및 친환경사랑방 설치(3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 발전 폐열(700Mcal/h) → 다목적 캠핑장·친환경사랑방 공급</li> <li>○ 친환경사랑방은 온실 농작물 판매공간·친환경 체험공간으로 활용</li> <li>* 주민참여(9억원) : 캐러반 및 내부설비 투자</li> </ul> </li> <li>◆ 소각 발전 폐열 활용 농작물 온실 설치(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참여(2억원) : 현물 및 내부설비 투자</li> </ul> </li> </ul>
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사랑방 옥상에 태양광 발전(14kW) 시설 설치(0.5억원)</li> </ul>
문화/관광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립시설 진입로 주변 경관정비 및 환경생태공원 조성(6.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설치된 환경드림파크와 연계된 환경생태공원 조성하여 경주 폐기물종합단지 홍보·교육과 인근 보문 관광단지 연계</li> </ul> </li> </ul>
예상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캠핑장·친환경사랑방·온실 난방비 절감 : 2.5억원/년</li> <li>◆ 다목적캠핑장 조성·운영 수익 : 4.5억원/년</li> <li>◆ 농작물 재배용 유리온실 운영, 농작물 판매수익 : 0.9억원/년</li> <li>◆ 환경개선·환경생태공원, 다목적 캠핑장 방문객 편익 : 3.5억원/년</li> </ul>

### □ 세부 사업내역

(금액단위: 억원)

사업명	국비	지방비	주민투자	합계
소각폐열 공급배관 설치	3	3		6
농작물 재배 온실 설치	1.8	1.8	2	5.6
다목적 캠핑장 조성	8.8	8.8	8.8	26.4
친환경사랑방 설치	3.3	3.3		6.6
환경생태(건축) 공원 조성	3.2	3.2		6.4
설계비 등	4.9	4.9		9.8
계	25	25	10.8	60.8



#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범례

- 1 소각폐열공급
- 2 온실
- 3 다목적캠핑장  
오토캠핑장(15면)  
카라반(15면)  
목조주택(10채)
- 4 친환경사랑방
- 5 환경개선
- 6 견학코스



오토캠핑장 15면



카라반 15면



목조주택 10채



입구사자문주  
BT영양문주



온실



견학코스



친환경사랑방



환경개선 왕벚나무초화류

## 라. 경상북도 영천시

### □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폐자원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시설 및 발전시설 설치(382억원, 기존 예산)</li> <li>○ 바이오가스 발전(10,000m<sup>3</sup>/일, 500kW 2기) → 발전기 폐열 보일러 → 하수슬러지 소화조·퇴비화시설 열원 공급</li> </ul>
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장 유희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300kW, 10억원)</li> <li>○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소내 활용으로 에너지자립화 및 전기자전거 대여점에 전력 활용</li> <li>◆ 경로당(3개소)에 태양열 보일러 설치(0.6억원)</li> <li>◆ 태양광 전기자전거 대여점 설치(1.5억원)</li> </ul>
환경 개선 및 문화/관광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취저감시설 설치(9억원)</li> <li>○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 악취저감시설 설치</li> <li>◆ 하수처리수 재활용 통한 금호강 수변벨트 생태습지 조성(7.6억원)</li> <li>○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생태습지 조성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 및 화랑설화공원 연계로 관광지화</li> </ul>
예상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 발전 매진 및 난방비 절감 : 1.8억원/년</li> <li>◆ 생태습지 주변 문화/관광 수익 : 1.9억원/년</li> <li>◆ 전기자전거 대여점 운영 수익 : 0.4억원/년</li> </ul>

### □ 세부 사업내역

(금액단위: 억원)

사업명	국비	지방	주민투자	융자	합계
악취저감시설 설치	4.5	4.5			9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5	5			10
경로당 내 태양열 보일러 설치	0.3	0.3			0.6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1.5	1.5			3
생태습지 조성	4	4			8
설계비 등	1.6	1.6			3.2
계	16.9	16.9			33.8

# 영천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범례

- 1 생태습지
- 2 태양광 전기자전거 대여점
- 3 가축분뇨처리장 내 악취저감설비
- 4 태양열 보일러
- 5 마을정자(휴게공간)
- 6 슬러지 감량화시설(연계사업)

4 토남동,쿠암리 경로당개소



5 토남동,쿠암리 2기소



회랑설화마을

금호강

영천하수처리장

환경생태공원

유기성퇴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쿠암리(15가구)

## 마. 경상남도 양산시

### □ 주요 사업 내용

구분	사업내용
폐자원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활용 공급배관 설치(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공급 배관(138Mcal/h,) → 그린하우스 및 인근 온실 내 공급</li> </ul> </li> <li>◆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활용 그린하우스(가칭) 설치(2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평 규모 그린하우스 설치 → 판매 인프라 시설(작물 직판 및 홍보공간), 목욕시설, 생산인프라 시설(작물선별장, 저온저장시설 등)으로 활용</li> </ul> </li> <li>* 주민참여(0.3억원) : 작물선별기 및 내부설비 투자</li> <li>◆ 친환경 족욕장 및 체험형 주말농장 설치(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하우스(가칭) 부지 내 친환경족욕장 및 체험형 주말농장 설치로 휴게공간 조성 → 수라도 테마가로, 낙동강 자전거길, 문화마당 연계</li> </ul> </li> </ul>
재생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하우스(가칭) 설치육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30kW, 2억원)</li> </ul>
예상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인프라 공간 운영 수익 : 1.3억원/년</li> <li>◆ 생산인프라 공간 운영 수익 : 4.1억원/년</li> <li>◆ 목욕시설 운영 수익 : 0.4억원/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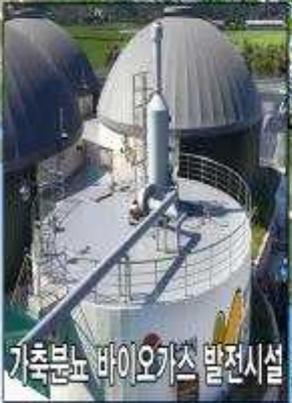
### □ 세부 사업내역

(금액단위: 억원)

사업명	국비	지방	주민투자	합 계
바이오가스 발전 폐열 공급배관 설치	4	4		8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1	1.1		2.2
그린하우스(가칭) 설치	10	10	0.4	20.4
친환경 족욕장·체험용 주말농장 설치	0.5	0.5	0.1	1.1
설계비 등	2.4	2.4		4.8
<b>계</b>	<b>18</b>	<b>18</b>	<b>0.5</b>	<b>36.5</b>

**양산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 범례**
- 1 발전폐열공급
  - 2 태양광발전
  - 3 체험형시설(족욕장, 주말농장)
  - 4 그린하우스



## 홍천 시범사업 성과

- (의의) 국내 최초인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준공함으로써 우수사례를 창출하여 조기 확산의 동력을 확보
- (기간/투자비) '14.10.30~'15.12.10/120억원(국고50%), 민간 10억원

투입원료	자원화시설	자원화된 량
<p>가축분뇨 (80 m<sup>3</sup> /일)</p> <p>음식물폐기물 (20 m<sup>3</sup>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바이오가스화)</p>	<p>바이오가스(메탄) (3,000 m<sup>3</sup> /일)</p>
<p>하수·분뇨처리찌꺼기 (20 m<sup>3</sup> /일)</p> <p>가축분뇨바이오 가스화찌꺼기 (30 m<sup>3</sup>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퇴·액비화)</p>	<p>퇴 비 (15 m<sup>3</sup> /일)</p> <p>액비(液肥) (24 m<sup>3</sup> /일)</p>
<p>태양광 발전 (343kW)</p> <p>소수력 발전 (17kW)</p>	 <p style="text-align: center;">(태양광)                      (소수력)</p>	<p>발전 량 (425천 kWh/년)</p> <p>발전 량 (149천 kWh/년)</p>

※ 도시가스·상하수도 보급,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병행 추진

- (주요성과) 마을소득(1.9억원/년 : 홍천군에 귀속되는 바이오가스 판매대금 2.7억원/년은 별도)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잘사는 마을'로 변모
  - (주민소득 창출) 주민들의 자체 난방비 절감(연간 42백만원), 퇴·액비 판매 수익(연간 52백만원), 태양광·소수력 발전(연간 96백만원)
    - \* 태양광 판매수익(58백만원/년) 및 소수력발전 전기 커뮤니티센터 공급(38백만원/년)
  - (일자리 창출) 마을 영농조합, 퇴·액비시설 등에 7명 상시 고용
  - (가구수 증가) 1983년 107가구이던 마을이 2014년 57가구(119명)로 감소하였으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준공되면서 70가구(139명)로 증가

## 질의응답

### 1. 친환경에너지타운이란 무엇인지?

-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란 기피·혐오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국민 인식을 전환\*\*하여 향후 기피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임

\* 도시가스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도시가스 공급

\*\* NIMBY(Not In My Back Yard) → PIMFY(Please In My Front Yard)

-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기존 기피시설을 에너지시설로 전환하여 환경문제와 에너지 공급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음

\* 독일 윤데마을 : 마을 인근의 축산분뇨, 에너지 작물을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연 4~5백만kWh생산)을 통한 주민 난방비 절감 및 소득증대

### 2.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왜 필요한지?

- 기피·혐오시설 및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님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피·혐오시설이 지역주민의 소득과 생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이 고압 송전선·송전탑 및 대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반대가 극심한 상황

- 향후 기피시설 입지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필요

### 3. 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방향은?

-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이 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여 다양한 수익(에너지생산, 관광 등)을 창출토록 하는 제도로써
  - 정부의 추가적 지원 없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먼저 정부주도로 우수사례 발굴 등 확대기반을 마련한 후 자연적으로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1단계로 2017년까지는 정부 주도로 15~20개소\*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확대 기반\*\*을 구축하고,
    - \* 환경부 9~10개, 산업부 3~5개, 농식품부·농진청·해수부 각 2~3개 내외
    - \*\* 다양한 소득창출 유형 발굴, 지원제도 정비, 관련 기술 개발 등
  - 2단계로 2018년부터는 민간주도로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주요 모델은 수출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임

### 4. 현재까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상황은?

- 정부합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T/F」 구성\*(14.1.9)하여 부처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수립(14.12.19)하였으며,
  - \* 국조실 국무2차장을 팀장으로 기재·미래·산업·환경·국토부 등 9개 부처 참여
  - \*\* 친환경에너지타운 비전과 목표, 중장기 추진전략, 사업유형, 지원방안 등
- 다양한 사업 모델 발굴 등을 위해 강원 홍천(환경부), 광주광역시(산업부), 충북 진천(미래부) 등 3개 지역 시범사업을 포함 금년까지 총 19개소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 2015년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10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음

\* 환경부 5개소, 산업부 4개소, 농림부 1개소

○ 2016년에는 6개소를 추가로 선정(환경부 5, 산업부 1)

## 5. 향후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 계획은?

○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준공에 따라 전국적 확산 추진

-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목표(10개소) 조기 달성('17→'16)

\* 지정현황 : '14년 1개소, '15년 5개소, '16년 5개소

- 환경기초시설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다양한 수익 모델 발굴과 기업·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표준화\* 방안 마련

\* 수익사업(도시가스, 태양광 등)에 맞는 기업·주민의 역할과 절차 등

-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과정\* 개설 및 좌담회·설명회 등 소통 강화(주민)

\* 지자체 공무원, 마을이장, 관련 기업 담당자 대상(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단계(정부주도) 사업 사후관리와 신규 참여 지자체와 향후 기업 등을 컨설팅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센터 지정

## 전문용어 설명

□ **에너지신산업** :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약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에너지공급이나 수요관리를 혁신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업

사 업 명	주요 내용
① 수요자원 거래시장 	건물, 공장 등의 절전설비를 활용, 절약한 전기를 모아 감축지시 또는 입찰하여 전력시장 수익 창출
② ESS(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전력피크 감축, 전력 공급 안정화, 전력판매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
③ 에너지 자립섬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기를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
④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고가의 배터리 등 전기차 확산을 저해하는 문제를 신산업을 통한 시장 기능으로 해소
⑤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인근의 농업, 수산업 등에 활용
⑥ 태양광 대여 	태양광 설비를 가정에 빌려주고, 줄어든 전기요금 등을 통해 수익 창출
⑦ 제로에너지빌딩 	단열 성능을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⑧ 친환경에너지타운 	주민 기피시설에 청정 기술을 적용하고, 에너지공급을 통해 주민의 수익모델을 구현

□ **바이오가스화시설** : 유기성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슬러지)등을 활용하여 혐기성소화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주성분 메탄)를 생산하는 시설

## 민관이 힘을 합쳐 정시 퇴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시킨다

- 일·가정 양립과 생산성 향상 위해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 선언!
  - 안심출산 문화 조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부터 출발~!
- 9.28(수),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7개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가 힘을 모아,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10대 제안) ①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 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③ 업무집중도 향상, ④ 똑똑한 회의, ⑤ 명확한 업무지시, ⑥ 유연한 근무, ⑦ 똑똑한 보고, ⑧ 건전한 회식문화, ⑨ 연가사용 활성화, ⑩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또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현장에 정착시킨다.

○ 고용노동부는 9월 28일(수) 천호식품 서울사옥에서 관계부처, 경제 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5.12.15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16.3월부터 구성·운영

□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근무혁신 방안 실천선언”을 통해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올 4/4분기부터 적극 확산하기로 하였다.

○ 우선, 정부는 소속기관 및 주요 기업 등 ‘근무혁신 주요 확산 대상’을 중심으로 실천서약 캠페인을 추진하고, 근무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확산하는 등 일터문화의 개선을 위해 적극 추진한다.

\* (고용부) 일·가정양립 캠페인 참여기업, (기재부) 공공기관, (여가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복지부) 저출산 관련 기업, (인사처) 중앙부처,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 경제 5단체는 '근무혁신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담당자나 경영진이 참석하는 회의·강연 등에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서 실천·확산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무혁신 강조기간(10.17.~11.18. 예정) 동안 집중 홍보 추진

○ 또한, 이날 민관협의회에서 근무혁신 우수기업(㈜우아한 형제, 잡플래닛)은 사례발표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직원 만족도·업무몰입도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 (우아한 형제 사례) 일·가정양립 및 근무혁신방안(4.5일 근무제, 불필요한 보고 지양 등)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율 100% 및 최근 3개년 연평균 70% 성장 달성

□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안심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근로자는 누구나 필요한 만큼 맘 편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을 이달(9월)부터 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임신근로자는 우대 지원한다.

<예시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예시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만 감소) 수령 가능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 또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대규모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1,000개소(민간: 550개, 공공: 450개)를 중심으로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현황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16년>

▲ 응답기업(기관) 1,891개소(민간 989개, 공공 902개) 중 55.6%인 1,052개소(민간: 560개 56.6%, 공공: 492개, 54.5%)에서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

※ 설명회 일정(안): 10.19(수) 14:00 대한상공회의소, 10.26(수) 14:00 중소기업중앙회

-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천호식품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등 기업의 임신·출산지원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확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임신·출산지원 우수사례

▲ 이마트의 '임신기 일괄 단축 근무제': 법정 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이외의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 일괄 적용

▲ 천호식품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 양육비 2년간 월 30만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월 25만원) 등 지원

- 고용선 고용부차관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의 자발적 실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임신초기부터 시작하여 출산·육아기까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버티기 힘든 기업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2. 일·가정 양립 및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방안
3.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방안

## 참고 1

## 제3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1. 민관협의회 개요

- 일시: '16.9.28(수), 10:00~11:40
- 장소: 천호식품 서울사옥(서울역 인근 메트로타워6층)  
\* 1부: 강당, 2부: 회의실
- 참석대상: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위원(19명) 및 기업관계자

### 2. 세부 일정

#### <1부: 일·가정 양립 근무혁신 방안 실천선언(공개, 30분)>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7 (7)	▪ 행사 안내 ('2) -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방안 ('5)	사회자
10:07~10:20 (13)	▪ 우수사례 발표 - 우아한형제들<근무혁신 사례> ('5) - 잡플래닛<기업문화 조사 내용 등> ('8)	해당 기업 관계자
10:20~10:30 (10)	▪ 실천선언 및 실천서약 - 실천선언(경제단체대표) ('3) - 실천서약(고용부·경제단체·기업 대표) ('3) - 기념사진 촬영 ('4)	경제5단체 대표(경총) 고용부차관-경총-천호식품 고용부차관-경총-천호식품

#### <2부: 주요안건 논의(비공개, 65분)>

- ①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 방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패키지 활용 방안
  - 천호식품 “출산장려 프로그램” 발표
- ② 경제단체별 일·가정양립 3/4분기 성과 및 4/4분기 향후계획
- ③ (서면) 각 부처 요청사항(복지부·여가부·고용부)

시 간	내 용	비 고
10:35~10:40 (’05)	▪ 개 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
10:40~10:45 (’05)	▪ 인사말씀	고용부 차관
<b>Part 1. 안건 설명</b>		
10:45~11:05 (’20)	①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방안(’5) - 천호식품 “출산장려프로그램” (’5)	고용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천호식품 관계자
	② 경제단체별 일·가정양립 추진계획(’10)	경제 5단체(각2분)
<b>Part 2. 안건 토의</b>		
11:05~11:40 (’35)	▪ 발제 안건에 대한 토의(’30)	고용부 차관 주재
	▪ 정리 및 마무리말씀(’5)	고용부 차관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위원 명단

구 분		위원	
		이름	직책
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위원	정부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정현민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
	경영계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상무)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상무)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상무)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상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박찬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
	학 계	권 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붙임 2>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 선언’ (‘15.12.15 경총 등 경제5단체) 이후 중앙-지역단위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 “일·가정 양립”의 현장 착근과 쏠사회적 확산 지속 추진 중

- \* (주요내용) 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②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유연근무 등 정착  
 ③ 직장어린이집 확대, ④ 남성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⑤ 실천 지원 및 모범사례 공유·확산 위한 민관합동 협의채널 참여

<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개요 >

- **(중앙)** 고용부차관(주재), 기재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국장, 경제5단체 본부장(상무), 여성경제인단체장 및 민간전문가(‘16.3월~, 분기 1회)  
 ▲ (기능) 일·가정양립 실천현황 모니터링, 민관합동 캠페인, 협업과제 발굴·논의 등
- **(지역)** 47개 지역고용노동(지)청장 주관으로 관내 지자체, 노사단체, 유관기관 (새일센터 등),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율구성(‘16.6월~, 월 1회)  
 ▲ (기능) 일·가정양립 실천현황 모니터링, 민관합동 캠페인, 협업과제 발굴·논의 등

-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 경제단체별로 남성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중점과제\*를 전담·추진 중

- \* (경총)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전경련)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 **향후 계획**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 만들기” 민관공동 4대 캠페인을 대대적 추진 중(‘16.하)

- \* ①휴가사유 없애기, ②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카톡 사용자제, ③5가지 일·가정양립 저해어와 권장어 선정·공유, ④CEO 직접참여 기업문화 개선

- 또한 야근 문화개선 및 정시퇴근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의 통일된 근무혁신 및 근무효율화 방안을 마련, 공동 실천 노력 계획(‘16.하)

##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가정 양립이 미흡한 국가이며
  - 과도한 일중심의 문화는 노동생산성, 삶의 질, 사회자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 현황 >

- **‘일과 삶의 균형’ 지표: 36개국 중 33위(10점 만점에 5점)**
  - \*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15년 결과
- **연간 근로시간: 34개국 중 3위(2,057시간)** \* OECD 평균: 1,706시간
  - \* stats.oecd.org '14년 결과
- **노동생산성: 34개국 중 25위(29.9\$)** \* OECD 평균: 40.5\$
  - \* 2013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분석결과(한국생산성본부, '15.8월)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자본 점수: 28개국 중 28위(3.4점)**
  - \* 여성의 일가정양립과 사회자본('14.8월, 현대경제연구원)

-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직무소진(번아웃 증후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 번아웃 증후군: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현상

### <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문제 >

- **경력단절여성 규모('14년): 205만명** - 결혼·임신·출산·육아 사유가 91%
- **출산율: 15년간 초저출산\* 현상 지속**
  - \* 합계출산율 1.3명 미만
- **직장인의 65%가 직무소진(번아웃 증후군)을 경험**
  - \* 직장인 1,015명 대상 설문조사(이지웰페어, '15.8월)

-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인식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으며\*,
  - \* ‘일을 우선시 한다’ 53.7% > ‘가정을 우선시 한다’ 12%(통계청 '15년 사회조사)
-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는 방식·문화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내눈치법’ 등 사회적 인식 및 직장문화 개선의 선행이 필요

## 2 관련 현황

### <한국기업문화 진단 결과>

분야	야근	회의	보고	업무지시	회식	여성근로
점수*	31점	39점	41점	55점	77점	49점

(출처: 한국기업의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진단 보고서, 대한상의·맥킨지, '16.3.)

\* 해당 영역 기업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을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 ○ (일하는 시간) 야근 및 퇴근 후 업무연락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 관행

- 평균 야근 일수는 2.3일(주 5일 기준), 3일 이상 야근하는 비율은 43.1%에 달하며, 야근을 할수록 생산성이 줄어드는 '야근의 역설\*' 발생 ('16.3월, 맥킨지 조사, 근로자 4만 여명 대상)

\* 습관적 야근을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45%) <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58%)

- 업무시간 이외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비율은 70.3%(1,688명), 평균 사용시간은 주당 11시간 이상으로 나타남

\* '15년, 한국노동연구원, 「스마트기기 사용이 근로자의 일과 삶에 미치는 영향」

#### ○ (일하는 방식) 경직적 근무, 장시간 회의, 대면보고 등 비효율적 업무방식

- 회의의 39%, 보고준비의 31%, 총 업무시간의 43%가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 업무처리로 인한 야근 초래

\* '16.3월, 맥킨지, 9개기업(45명 대리급 근로자) 대상 Time Survey 수행 결과

#### ○ (일하는 문화) 사내눈치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 부담·야근 등의 문제

- 사내눈치(57.1%), 복귀의 어려움(42.1%), 대체인력 부족(38.6%)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90.3%에 달함

\* 취업포털 사람인 조사, 직장인 1575명 대상, '16.7월

-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시퇴근 문화 확산, 직장문화 개선 등 일하는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음

#### <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요인(복수응답) >

구분	정시퇴근 문화 확산	사회적 인식과 직장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	업무량 조절	보육지원 확대	기타
비율	63.9%	46.4%	36.0%	29.0%	23.9%	0.8%

(출처: 「가족사랑 위시리스트」, 여성가족부, '15.7월)

⇒ LG유플러스(10-Don'ts&10-Do's), 현대이노션(해요마요 10계명) 등은 불합리한 근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추진

### 3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 방안

- ❖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선언을 계기로 실천서약 캠페인, 강조기간 운영 및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홍보, 근무혁신 인식·실태조사 추진 등 현장에서의 실천·확산 선도

#### □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선언

- 일하는 방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내용을 담은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민관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마련**(제3차 실무회의(8.10.))
  -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선언식」을 개최하고, 일하는 방식·문화의 변화가 현장에 정착하도록 **적극적인 활동** 개진

#### □ 근무혁신 실천 캠페인 추진

- (정부) 각 부처는 소속기관 및 주요 확산 대상 기업에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확산, 「근무혁신 실천서약」을 통해 참여기관·기업 확대

부처	주요 확산 대상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 캠페인 참여기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
보건복지부	저출산 관련 기업
인사혁신처	중앙부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시·도교육청

\* 인사혁신처는 '16.2월부터 중앙부처 대상으로 기시행 중인 공무원 근무혁신지침 지속 추진

- (경제 5단체) 근무혁신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고, CEO 참석 회의·강연 등을 통해 경영진·근무혁신 10대 제안 적극 확산

\* 10.17.~11.18. 1개월을 근무혁신 강조기간으로 운영하며, 홈페이지에 배너 공동 게시, 포스터 배부 등 홍보 진행

#### □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실태조사 추진

- 각 기관은 근무혁신 실천서약 기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민관협의회에서 사례 공유
  - 소속기업·근로자에 '근무혁신 수기공모전' 참여 독려(~10.14.)
- 「일·가정양립 컨퍼런스」에서 근무혁신 우수사례 발표(11.16.) 및 기업·근로자 대상 근무혁신 인식·실태조사 추진

<붙임 1>

한국기업 조직건강도와 기업문화 조사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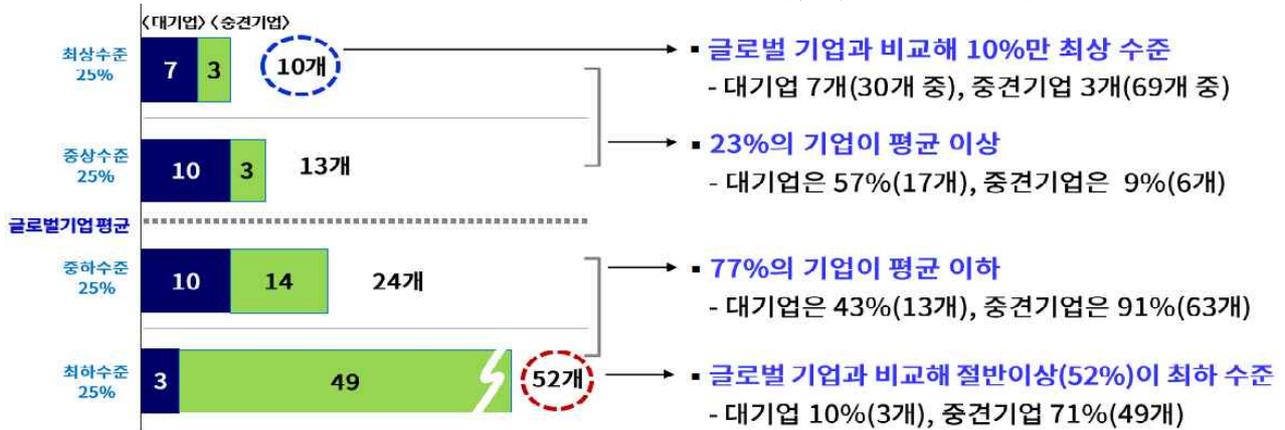
①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100개소(대기업 31개소, 중견기업 69개소), 40,951명 조사  
\* (주체·기간) 대한상의·McKinsy&Company, 2015.6.~12.
- 조사 방법 : 조직진단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Time Survey\*  
\* 다양한 기업의 대리급 직원을 샘플링하여 일주일 일과를 시간별로 기록·분석
- 조사 내용 (총 17개 영역, 117개 문항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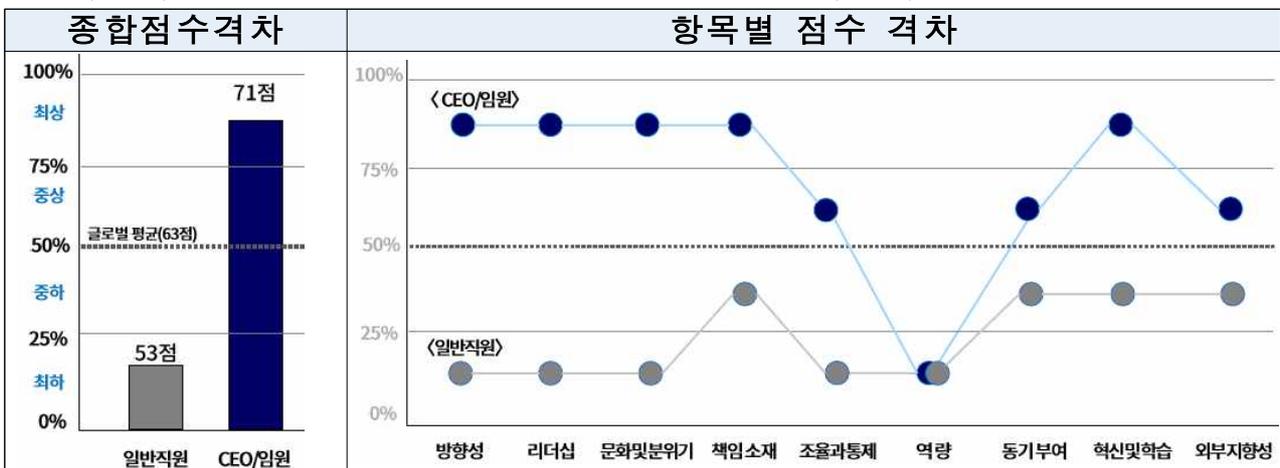
진단내용		조사영역
맥킨지 조직건강도	9개 영역 98개 문항	①방향성, ②책임소재, ③조율 및 통제, ④외부지향성, ⑤리더십, ⑥혁신 및 학습, ⑦역량, ⑧동기부여, ⑨문화 및 분위기
한국형 기업문화	8개 영역 19개 문항	①야근, ②회의, ③업무지시, ④보고, ⑤회식, ⑥여성인재, ⑦규범준수, ⑧상생협력

② 조직건강도 진단결과

-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 진단기업의 77%가 평균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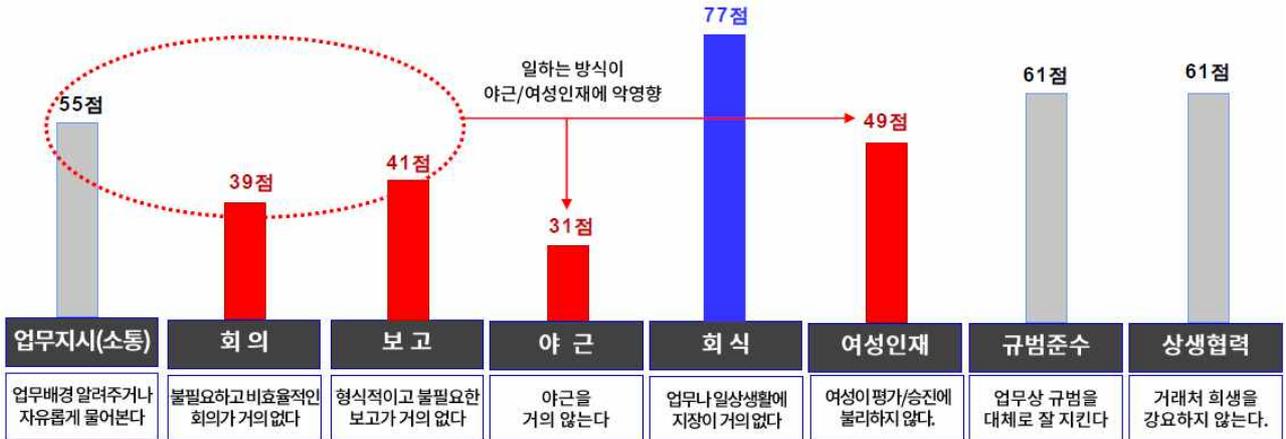
- 경영진은 기업의 방향설정, 리더십, 조직문화 등을 매우 높게 평가(71점)하지만, 일반직원은 매우 낮게 평가(53점)



### ③ 한국형 기업문화 진단결과

○ 야근이 가장 심각한 문제\*(31점), 회식은 상대적으로 양호(77점)

\* (평균 야근일수) 1일(21.5%), 2일(23.2%), 3일(21.8%), 4일(12.4%), 5일(8.9%), 없음(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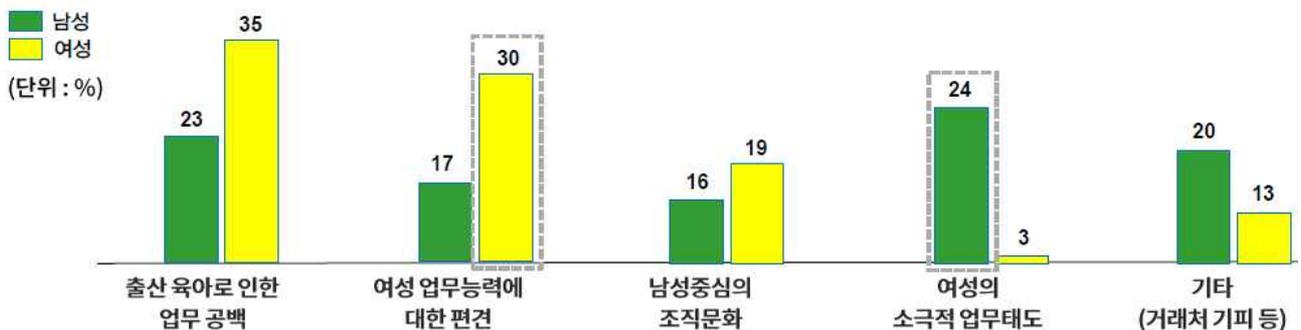
- 야근을 많이 할수록 생산적인 업무시간은 줄어드는 '야근의 역설\*' 발생

\* 습관적 야근을 하는 근로자의 생산성(45%) < 다른 근로자의 생산성(58%)

○ 비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등 비합리적인 업무방식이 만연하며, 상명하복의 전근대적 문화, 개인특성에 의존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등 과학적인 업무프로세스 설계가 부족



○ 승진 등에서 여성이 불리한 이유에 대해 남성은 '여성의 소극성(24%)', 여성은 '출산·육아(35%)'로 응답하여 성별 인식차이 존재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선언문

근무혁신 10대 제안 확산을 위한 실천 선언

경직적인 장시간 근로관행, 낮은 노동생산성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고용문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 경제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는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무혁신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장시간 근무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유연한 근무형태, 효율적인 회의와 보고 등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하는 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의 확산을 가로막는 사내눈치법을 타파하는 등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관협의회의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 근무혁신 10대 제안

1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 정시 퇴근하기
- 가족·문화와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2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단체)카톡 자제
-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3



**업무집중도 향상**

- 근무시간 중에는 업무에만 집중하고 사적인 용무 자제
-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장시간 근무관행 바꾸기

일·가정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

4



**똑똑한 회의**

- 꼭 필요한 회의만 간결하게 효율적으로 진행
- 회의일정·안전 사전 공유

5



**명확한 업무지시**

-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 보고서 방향 사전협의로 명확화

일하는 방식 바꾸기

6



**유연한 근무**

- 업무의 질과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 확산
- 다양한 유연근무\*의 적극 도입 및 눈치보지 않는 활용 유도
- \*사차출퇴근, 재량근무, 탄력근무, 원격근무, 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7



**똑똑한 보고**

- 불필요한 대면보고 안하기
-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8



**건전한 회식문화**

- 꼭 필요한 회식만, 일정은 사전공유
- 문화회식 활성화

9



**연가사용 활성화**

- 연가사유 묻지 않기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10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부서장부터 장시간 근무·일하는 방식·일하는 문화 바꾸기 실천
- 직원과 근무혁신 가치 공유하기

일하는 문화 바꾸기

근무혁신·유연근무 수기공모전

눈치는 마침표! 야근은 줄임표! 삶은 이음표!

# 유연근무 근무혁신 수기공모전

**2016. 9. 5(월) ~ 10. 14(금)**

일·가정양립제도와 기업문화혁신으로 행복해진  
대한민국 기업과 직장인들의 **사연**을 공모합니다!

<p><b>참가대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근무, 근무혁신을 경험한 모두! (근로자, 기업)</li> </ul> <p><b>공모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제도 도입 및 활용 사례</li> <li>● 정부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제도* 활용 사례 <small>*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도입 중소기업 지원제도</small></li> <li>● 일하는 방식·문화의 변화 등 근무혁신 사례</li> </ul> <p><b>참가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 작성 후 이메일(moel0602@gmail.com)로 접수 <small>※ 아래 파란 버튼을 클릭하면 양식다운로드 가능 ※ 한글문서 기준 폰트크기 12, 줄간격 160%, A4 2~3장 이내</small></li> </ul>	<p><b>시상내역</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최우수상</td> <td>상장 및 모바일 상품권 50만원권 2명 (개인/기업 각 1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수상</td> <td>상장 및 모바일 상품권 30만원권 4명 (개인/기업 각 2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장려상</td> <td>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 6명 (개인/기업 각 3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유상</td> <td>편의점 3천원 기프티콘 30명</td> </tr> </table> <p><b>참여기간 및 발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모 기간</td> <td>2016년 9월 5일(월) ~ 10월 14일(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 발표</td> <td>2016년 11월 2일(수), 일가양득 홈페이지, 페이스북 공지</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 일가양득 컨퍼런스(11월 16일 예정)에서 시상식 진행 예정</p>	최우수상	상장 및 모바일 상품권 50만원권 2명 (개인/기업 각 1명)	우수상	상장 및 모바일 상품권 30만원권 4명 (개인/기업 각 2명)	장려상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 6명 (개인/기업 각 3명)	공유상	편의점 3천원 기프티콘 30명	공모 기간	2016년 9월 5일(월) ~ 10월 14일(금)	당첨자 발표	2016년 11월 2일(수), 일가양득 홈페이지, 페이스북 공지
최우수상	상장 및 모바일 상품권 50만원권 2명 (개인/기업 각 1명)												
우수상	상장 및 모바일 상품권 30만원권 4명 (개인/기업 각 2명)												
장려상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 6명 (개인/기업 각 3명)												
공유상	편의점 3천원 기프티콘 30명												
공모 기간	2016년 9월 5일(월) ~ 10월 14일(금)												
당첨자 발표	2016년 11월 2일(수), 일가양득 홈페이지, 페이스북 공지												

**Click! 양식다운로드**

<붙임 5>

근무혁신 우수사례

구분	내용
사업장명	(주)우아한 형제들(송파구 석촌동 158-2 보정빌딩10층)
업종/생산품	모바일SW개발 및 공급업, 광고디자인
근로자수	369명 <여성 150명>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① 근무혁신 10대 제안 관련 추진 중인 내용

- '2016 새마음운동' 시행 : 퇴근할때 인사하지 않습니다 / 휴가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11가지 방법'이라는 업무수행 가이드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문화 정착 및 전파(불필요한 보고절차 지양, 메신저, 이메일 적극활용)

② 임신·출산 근로자 등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지원 제도 내용

- 임신/출산 근로자 및 모성보호 관련
  - \* 임신직원에게 '여신'호칭부여, 전사의 축하 및 보호
  -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시행 : 하루 2시간 자율적으로 단축근무
  - 임신기간 중 태아검진일에 본인과 배우자 1일 유급휴가
  - 여성 생리휴가 : 연간 유급 7일
  - 유사산 휴가 강제부여 : 신청시 부여가 아닌 강제 부여

③ 일가정 양립 관련

- 4.5일 근무제 : 월요일은 오후 1시 출근
- 결혼휴가 및 남자직원 출산휴가 : 2주(유급)
- 우아한 학무모 휴가 : 각급학교의 가족 축하가 필요한 행사(입학, 졸업, 발표회 등)에는 1일 유급휴가
- 우아한 어린이날 : 초등학교 및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은 어린이날 기준 앞뒤로 하루 더 휴가(4일, 6일 택 1일)
- 지만가 : 본인 및 가족(배우자,자녀,양가 부모님)의 생일과 결혼기념일 4시 퇴근

◇ 도입 배경

- 복지는 '행복한 삶'이라는 매우 명확하고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 결국 기업의 복리후생은 직원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상기와 같은 휴가제도가 하나씩 만들어졌음

◇ 도입 효과 : 직원 만족도·업무몰입도 증가, 기업이미지 및 인지도 급속 상승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율 100%
2. 최근 3개년 연평균 70% 성장(매출 기준) : 2016년 전년비 100% 성장 예상

구분	내용
사업장명	(주)브레인커머스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551 새롬빌딩 지하 1층)
업종/생산품	정보처리서비스업 / 잡플래닛
근로자수	51명 <여성 19명>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① 근무혁신 10대 제안 관련 추진 중인 내용

- 정시퇴근 문화 정착: 최근 3개월 전체 직원 평균 퇴근 시간 7시 20분 (공식 퇴근 시간 7시)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하프데이: 오후 3시 퇴근
- 연차/재택근무/출퇴근 시간 근무 등 근무 일정 조정 당일 가능
- 재택근무 활성화: 하루 평균 3명 재택 근무
  - \* 메르스 유행 시기 10일간 전직원 재택근무 실시
- 격주 타운홀 미팅을 통해 목표 및 비전 전사 공유

② 임신·출산 근로자 등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지원 제도 내용

- 아빠 출산 휴가 2주
- 점진 휴가: 여성 직원 월 1일, 남성 직원 월 0.5일
- 아이와 함께 가는 워크숍 활성화: 10일 14일 워크숍 참여 자녀 수 5명
- 출산/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격주로 담당 업무 및 회사 상황 공유

◇ 도입 배경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제도의 정책화보다는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사내 문화로 정착하도록 추진
-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사적 활용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 정책 수립

◇ 도입 효과

- 우수인재 확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300% 가량 증가함
  - \*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 상, 우수인재의 확보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됨

◇ 향후 계획

- 회의 방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중

## 근무혁신 선도기업 사례

### □ LG유플러스



# LG U+ '인간존중의 경영'을 실천하는 일등 Leader 의 Don'ts & Do's '10-10'



### 10 Don'ts

#### 일하는 방식

- ① 퇴근 직전, 주말 등에 업무지시 (카톡, 문자 등)
- ② 업무 보고 등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 (고성, 흥분)
- ③ 상명하복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 언행

- ④ 인격모독적인 발언 (폭언, 욕설, 비하발언 등)
- ⑤ 수치심이나 오해를 일으킬만한 표현이나 행동 (성적, 비상식적 말)

#### 배려

- ⑥ 부하직원의 직무순환요청에 대한 무관심과 불이익
- ⑦ 번개모임, 주말 행사 참석에 대한 암묵적 강요
- ⑧ 불편한 회식 금지 (술잔돌리기, 의무적인 건배사, 금요일 등)

#### 정도경영

- ⑨ 불투명하고 사적인 법인카드 사용
- 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 10 Do's

#### 일하는 방식

- ① 업무와 휴식은 반드시 분리하기 (정시퇴근, 근무시간 내 업무 지시, 휴가사용 등)
- ② 회의 중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기
- ③ 목적, 납기 등 명확한 업무지시와 보고당일 의사결정

#### 언행

- ④ 소소한 칭찬과 격려를 매일 하기
- ⑤ 부하직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언행 '역지사지'

####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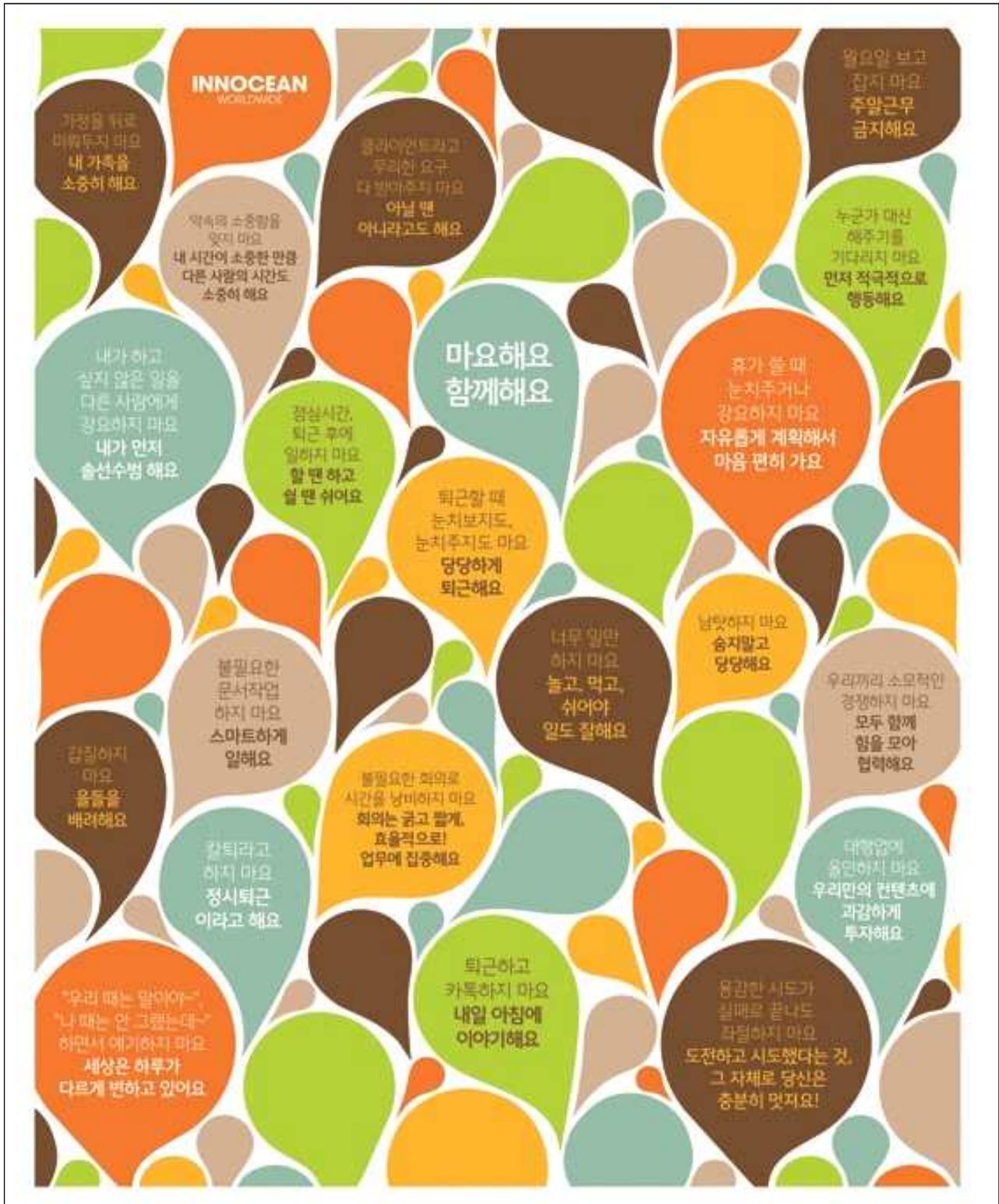
- ⑥ 부하직원의 경력개발면담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기
- ⑦ 팀워크 증진활동 및 워크샵은 평일, 사전 공지 후 진행
- ⑧ 회식은 1차만 (음주는 원하는 주종, 원하는 만큼만)

#### 정도경영

- ⑨ 공평한 기회 제공과 공정한 대우
- ⑩ 보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과장, 허위 없이 정직하게 보고

※ LG U+ 일등 Leader의 Don'ts & Do's 관련문의 : 즐거움직장팀 (joyfulplace@lgplus.co.kr)

□ 현대이노션: 마요해요 10계명



1 추진 배경

❖ 여성의 경력단절 근절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면서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문화 확산 시급

□ (성과 및 한계) 그간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핵심수단으로 추진

○ (성과) '15년에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각적인 안내·홍보 등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 확산 추세

※ 전환형 지원인원: ('15.8월) 129명 → ('15.12월) 556명 → ('16.8월) 1,005명

○ (한계) 전일제 중심의 경직적 근로관행,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획기적인 제도 활성화나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에 한계

-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16.4~6월) 결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기관)이 전체 응답기업(기관)의 절반 이상(55.6%)을 차지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현황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16년>

▲ 응답기업(기관) 1,891개소(민간 989개, 공공 902개) 중 55.6%인 1,052개소(민간: 560개 56.6%, 공공: 492개, 54.5%)에서 '활용 근로자 없음' 응답

□ (선택과 집중) 사업주·근로자의 수용성이 높고(법정 제도, 임금삭감 없음), 일·가정 양립의 출발점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확산에 집중

○ (안심출산 문화 조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통해 여성이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전환형 확산 기반 마련) 임신기 단축 경험을 토대로 전환기간·사유 확대 등 전환형 확산(모든 생애주기에 적용)의 획기적 전기 마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안심출산 기업문화 조성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의 핵심 열쇠(key) ⇒ 정책 타깃 설정해 역량 집중 필요

## 잠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금은? 월 60만원까지 지원!

- 📖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지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에 해당되므로 '전환지원금'을 지원 중
- (지원금 인상) 근로자(임금↓)와 사업주(비용↑)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환지원금을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16.9월~)
    - \* 전환장려금 20만원 → 40만원(20만원↑) +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20만원
  - (지원대상 확대) 짧은 기간 동안 단축근무를 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전환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에서 2주 이상으로 확대('16.9월~)
- 📁 <예시1>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임금 감소 없이 200만원을 수령하면서 단축근무(근로기준법 제74조)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 <예시2> 월 임금 200만원 임신근로자가 법정기간 외(임신 12주 초과~ 36주 미만)에 한 달 동안 2시간 단축하여 1일 6시간 근무하면?
- 근로자: 시간비례임금은 월 150만원이나, 정부가 사업주를 통해 전환장려금 40만원을 지원하므로 전환 후에도 월 190만원(10만원↓) 수령 가능
  - 사업주: 전환장려금 40만원(임금보전 후 수령) +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20만원 수령
- ※ 임신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는 1일 2시간 단축 시 월 24만원, 1일 3시간 이상 단축(1일 5시간 근무) 시 월 40만원까지 지원
- 📁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령 규정

-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의2(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 사업주 의무(근로자 권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금삭감 금지: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
  - (근로시간 단축 절차)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적시한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2 추진 방안

- ❖ 임신근로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안내 강화
  - ❖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1,000개소를 중점 타깃으로 선정해 집중 홍보, 우수사례 전파, 재정지원 연계 등 강화
- ☞ ('17년말까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ZERO' 목표

### 1 모성보호제도 안내 강화

- (제도 알리미 서비스) 안심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임신근로자와 그 기업에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실시('16.5월~)
- 고용부, 복지부, 건보공단, 고용정보원 협업을 통해 SMS 서비스 및 유선 안내 등 모성보호 홍보 강화, 사후 모니터링

▲ 가임기(15~49세) 여성이 10명 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팩스와 e메일 등을 통한 제도 안내문 송부

- 내용: 임신근로자 권리 및 ①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②육아휴직, ③출산휴가 등
- 실적(5~8월): 근로자 15,031명, 사업장 62,216개

- (타깃 기업 집중 홍보) 특히,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전혀 없었던 기업을 중심으로 1,000개소(민간: 550개, 공공: 450개)를 선정하여 집중 홍보
-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570개소(민간: 491개, 공공: 79개)는 별도로 확인하여 활용 근로자가 없을 경우 대상에 포함
- \* 보험전산망, 유선, 공문 등으로 확인한 후 여성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 타깃 기업 집중 홍보·지도 방안

- (설명회) 고용부(본부·지방관서), 경제단체, 노사발전재단 등과 협력하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중심의 대규모 설명회 개최
- 장소·일정: 서울, 2회<10.19(수) 대한상의, 10.26(수) 중기중앙회>(잠정)
- \* 불참 기업은 노사재단에 위탁수행 중인 ①파트너십프로그램, ②사업주단체 협력사업(경기경총 등 6개) 및 ③일가양득컨퍼런스(11.16) 등을 활용해 추가 설명회 실시

- **주요 내용:** 지원제도 안내, 우수사례 전파, 신청서 현장 배포 등으로 **컨설팅·재정지원 연계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한 제도 확산

\* ①임신기 단축제도 도입·운영 → ②전환사유·기간 등 단계적 확대 유도

※ **임신·출산지원 우수사례**

▲ 이마트의 '**임신기 일괄 단축 근무제**': 법정 기간(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이외의 모든 임신기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2시간 단축근무 일괄 적용

▲ 천호식품의 '**출산장려 프로그램**':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 양육비 2년간 월 30만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월 25만원) 등 지원

- (리플릿, 공문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공문 발송 및 방문 설명 등 실시(10월~)
-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안내·홍보 후에도 법정 모성보호제도 '**활용 제로(zero) 기업**'에 대해서는 법 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도·감독**

▲('16.下~'17.上) 반기별 제도 활용 실적 점검 → ('17년) 미활용 기업 중심 지도·감독

- ③ (실천 분위기 확산) 지방고용청 - 경제단체 - 주요 기업 간 임신기 단축 근무 등 일·가정 양립 실천 협약 체결 및 집중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단위 분위기 확산(지역단위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활용)

▲(9~10월) **전국 400개 기업·단체 참여 목표로 협약 체결** → (12월) 성과 점검

▲('16.下~'17.上) 주요 타깃 사업장 집중 컨설팅 → ('17.下) 중견·중소사업장 확대

- ④ (인식개선 캠페인) '**사내눈치**'를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절·선택하여 스마트하게 일하면서 업무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 지속 실시

▲**근무혁신 10대 제안**(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 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CEO 참여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등

<붙임 1>

건강보험-고용보험 연계를 통한 모성보호 강화 방안

1. 주요 내용

- (개요) 모든 임신부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정보와 고용보험의 근로자정보를 연계하여 얻어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법위반 사전 예방활동 및 사후 감독을 통한 임신·출산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본인 부담분)를 50만원까지 지원(건강보험 급여)



- (맞춤형 홍보) 임신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법적 권리 및 사업주 의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
  - 특히, 사업주에게는 처벌규정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제도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유도
  -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월 135만원)을 통한 사업주 유급의무 경감, 육아휴직 부여 장려금 지원(최대 월 20만), 대체인력채용 지원(최대 월 60만)
- (법 집행력 제고) 임신기부터 해당 여성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 등 이력을 추적하여 부당해고 의심사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부여 대한 적기 확인·조사 및 감독 효과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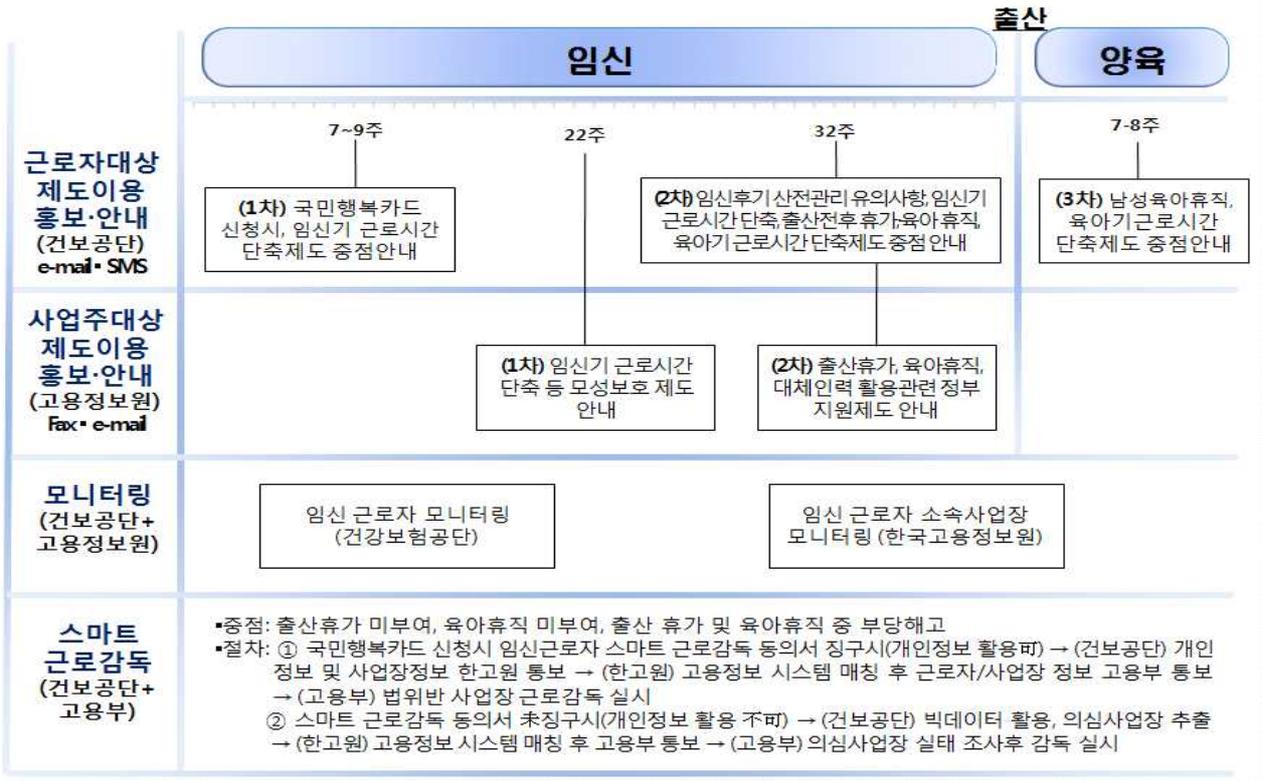
2. 추진 현황

- (알리미서비스) '16.5월부터 임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안내서비스 제공
  - \* ('16.5월) 3,537명 → ('16.6월) 3,796명 → ('16.7월) 3,874명
  - 가임기(15~49세) 여성근로자가 10인이상이면서 임신 5개월이 경과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 법적 의무사항 및 지원제도 안내
  - \* ('16.5월) 15,233개소 → ('16.6월) 16,799개소 → ('16.7월) 14,929개소

### 3. 향후 계획

- ◆ (현행) ① 국민행복카드 신청시 모성보호제도 이메일 통보  
② 스마트 근로감독은 사업장별 임신근로자 수 통보, 안내문 발송 단계

- ◆ (개선) ① 임신기간별 제도이용 안내(SMS 추가) 및 이용여부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  
② 빅데이터 활용, 제도이용·경력단절 모니터링 및 문제사업장 감독 본격개시



- (알리미서비스 강화) 근로자에게는 e-mail 외에 SMS 서비스도 추가하고, 발송횟수도 1회(임신 7~9주)에서 3회(임신 7~9주, 임신 32주, 출산 후 7~8주)로 확대하여 임신-육아 주기별 관리 강화
  - 사업주에는 발송횟수를 2회(임신 22주, 임신 32주 내외)로 확대하여 모성보호 및 대체인력채용지원 강화
- (모니터링) 임신근로자와 소속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제도활용을 제고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추진
- (스마트근로감독) 주요 3가지 범위반 유형\* 중심으로 집중 근로감독
  - \* ①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미만)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 총 500개 사업장 근로감독('16.6월~) 및 특히 범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30여개소 집중 기획감독 추진('16.下)

<붙임 2>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용 현황

<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 분석자료 >

□ 민간기업

① 법정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활용	%	활용		
				없음	%	
전체	989	429	43.4	560	56.6	
업종별	경공업	47	19	40.4	28	59.6
	중공업	101	35	34.7	66	65.3
	화학공업	58	27	46.6	31	53.4
	전자산업	49	26	53.1	23	46.9
	건설업	45	19	42.2	26	57.8
	운수업	36	14	38.9	22	61.1
	금융 및 보험업	61	36	59.0	25	41.0
	교육 서비스업	71	18	25.4	53	74.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	41	44.1	52	55.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6	29	63.0	17	37.0
	기술,R&D,전문기술서비스 업	32	19	59.4	13	40.6
	도매 및 소매업	53	42	79.2	11	20.8
	숙박 및 음식점업	32	23	71.9	9	28.1
	사업지원서비스업	177	64	36.2	113	63.8
	사업시설관리관련업	63	11	17.5	52	82.5
기타 서비스업	18	3	16.7	15	83.3	
기타	7	3	42.9	4	57.1	
규모별	1000명 미만	513	178	34.7	335	65.3
	1000명 ~ 5000명 미만	414	204	49.3	210	50.7
	5000명 ~ 10000명미만	38	27	71.1	11	28.9
	10,000명 이상	24	20	83.3	4	16.7
기업 소재지	서울	574	287	50.0	287	50.0
	경기	128	45	35.2	83	64.8
	인천	26	8	30.8	18	69.2
	대전/세종/충청	61	30	49.2	31	50.8

	광주/전라	30	7	23.3	23	76.7
	대구/경북	65	14	21.5	51	78.5
	부산/울산/경남	91	34	37.4	57	62.6
	기타	14	4	28.6	10	71.4

② 법정 제도 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현황 및 도입 계획

- (도입 현황) 989개 응답기업 중 ▲ 도입 160개(16.2%), ▲ 미도입 829개(83.8%)
- (도입 계획) 829개 미도입 기업 중 ▲3년 내 도입 294개(35.5%, 1년 이내: 86개, 2~3년 이내: 208개), ▲4~5년 내 도입 255개(30.8%), ▲도입 의사 없음 280개(33.8%)

□ 공공부문

① 법정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단위: 개)

구분	전체		중앙 정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		%		%		%
계	902	100.0	44	100.0	17	100.0	223	100.0
활용	410	45.5	20	45.5	7	41.2	100	44.8
활용 없음	492	54.5	24	54.5	10	58.8	123	55.2

구분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교육 기관	
		%		%		%
계	300	100.0	130	100.0	188	100.0
활용	167	55.7	36	27.7	80	42.6
활용 없음	133	44.3	94	72.3	108	57.4

② 법정 제도 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현황 및 도입(운영) 계획

- (도입 현황) 902개 응답기관 중 ▲도입 363개(40.2%), ▲미도입 539개(59.8%)
- (도입 계획) 539개 미운영 기관 중 ▲3년 내 도입 317개(58.8%, 1년 이내: 115개, 2~3년 이내: 202개), ▲4~5년 내 도입 117개(21.7%), ▲도입 의사 없음 105개(19.5%)

<붙임 3>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개요(요약)**

< '16.9.1 개정 기준 >

\*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b>시간선택제 전환</b> (전환형) 지원	<p>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돌봄,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p> <p>① 전환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p> <p>※ 지원대상: 전환기간 2주 이상 근로자</p>	<p><b>전환장려금</b>(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확인 후 지원): 전환 전후 시간비례 임금 차액의 일부를 1년간 지원(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p> <p>- 주15~25시간: 월 최고 40만원 - 주25~30시간: 월 최고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15~30시간: 월 40만원)</p> <p><b>간접노무비</b>: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년 지원</p> <p><b>대체인력 지원금</b>: 대체인력 인건비 50%를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 지원</p>
<b>신규 창출</b> (채용형) 지원	<p>근무체제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한 사업주</p> <p>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중소기업 120%) 이상 임금, ③ 주 15시간~30시간 근로, ④ 4대 사회보험 가입,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p>	<p>임금의 50%를 월 80만원(대규모기업 60만원) 한도로 1년 지원</p> <p>* 최저임금 120~130% 미만 중소기업은 월 40만원 한도</p> <p>* 중소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p>
<b>컨설팅</b> 지원	<p>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p>	<p>적합 직무개발, 근무체제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1,000명 이상 사업장은 30% 자부담)</p>

## < 시간선택제 지원금 인상 등 홍보 인포그래픽 >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



\* 대체인력 채용 시 월 60만원 추가지원(대기업 월 30만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인상



\* 대체인력 채용 시 월 60만원 추가지원(대기업 월 30만원)

<붙임 4>

임신·출산 지원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운영 우수사례

□ (주)이마트 (서울) -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제'

업종/생산품	도소매업
근로자수	29,341명 <여성 18,850명>
<p>◇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운영 현황</p> <p>① <u>임신기 일괄 근로시간 단축근무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임신중인 직원이 임신기간에 상관없이 임신사실을 회사에 통보 후, 일괄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 실시(출퇴근 시간 개인 자율지정)</li> <li>※ <u>모든 임신기간에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할 수 있도록 일괄 적용</u></li> <li>- 시행: 2016년 4월 확대 시행 - 사용현황: 3개월간 127명</li> </ul> <p>② <u>희망육아 휴직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 본인 희망 시, 최대 1년까지 희망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가능)</li> <li>- 시행시기 : 2011년 1월 - 사용현황 : 누계 322명(11~16년 기준)</li> </ul> <p>③ <u>난임여성 휴직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사원에게 휴직기회를 부여 &lt;3개월(1회) ~ 6개월(2회) 사용가능&gt;</li> <li>- 시행시기: 2016년 3월 - 사용현황: 4개월간 5명</li> </ul> <p>◇ 도입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및 난임여성에 대한 단축근무 및 휴직을 제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문화를 선도하고 임직원의 근무만족도를 제고</li> </ul> <p>◇ 도입 기대효과: 근무만족도 및 업무생산성 향상 → 일·가정 양립 지원</p> <p>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사원이 눈치 보지 않고, 임금하락 없이 단축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인해 출산준비 집중, 근무만족도 향상</p> <p>② (희망 육아휴직제)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외에 희망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하여 충분한 양육기간 보장, 근무만족도 향상</p> <p>③ (난임여성 휴직제) 적극적 출산지원으로 숙련된 인력의 이탈방지, 근무만족도 및 애사심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증대</p> <p>◇ 향후계획: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검토 및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연간 임신기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500여명, 희망 육아휴직 80여명, 난임휴직 15명 정도 활용 예상</u></li> </ul>	

## □ 임신부 보호제도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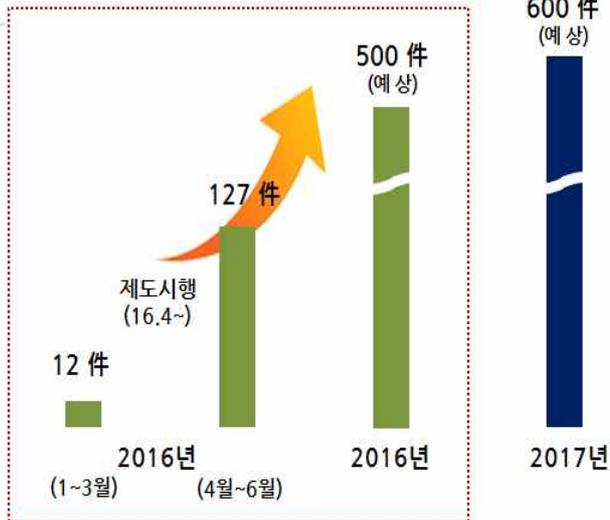
※ 상기 제도 외 **난임 휴직 제도** 운영 중 : 난임 여성이 임신 위한 개인 희망 시, 휴직 부여 (최대 6개월)

##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사용실적

### 임신주차에 관계없는 일괄 단축근무

- '눈치 보기' 없는 근로시간 단축근무
- ⇒ 임금 하락 無, 편안한 출산준비

37 件  
2015년



### ❖ 제도 사용실적

- ✓ 난임여성휴직 : (16.3월 도입~) 5명 사용
- ✓ 희망육아휴직 : 연평균 55명 사용
- ✓ 출산 휴 직 : 연평균 60명 사용

□ (주)천호식품 (부산) - '출산장려 프로그램'

구분	내용
사업장명	천호식품(주)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 6층)
업종/생산품	건강식품 제조업
근로자수	360명 <여성 234명>

◇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현황

① 출산장려 프로그램

- 희망의 스위치: 출산축하금(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양육비 2년간 월 30만원), 미취학 아동 교육비(월25만원) 등 지원
- 자녀 돌잔치 축하 답례품 패키지(회사 제품으로 선물 구성) 지원

② 모성보호 지원

-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14명) 및 가족돌봄 휴직 지원(1명)

③ 일·가정 양립 지원

- 회의문화 개선(불필요한 보고 줄이기, 전자보고·메모보고 활용 등)
- 집중근무시간 운영: 오전8시30분~11시50분은 회의 및 자리 이동 자제
- 정시퇴근 유도: 오후 6시 퇴근 송을 틀고 퇴근 독려
- 근로자 건강 지원: 부산 본사 건물 내에 찜질방, 수면실, 헬스룸 등 운영

◇ 도입 배경

- 20~30대 여성이 많아 결혼과 출산에 따른 퇴사율이 증가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 필요성 증대
- 보고 라인이 불명확 및 대면보고 시간 지연 등으로 업무 비효율성 증가

◇ 도입 효과

① 자유로운 모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여성근로자 퇴직률 감소

- 시행 전 : 2010년~2014년 연평균 12명, 시행 후 : 2015년~2016년 연평균 2명

② 불필요한 대면보고를 줄임으로써 직원들의 보고 부담 및 상사와의 마찰 감소

◇ 향후계획

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은 100%지만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1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임신근로자 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통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추진

<붙임 5>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등 업무협약 체결 계획

□ 본부 및 관서별 총 49회, 400여개 기업·단체와 체결(예정)

관서명	체결일정 <횟수>	협약 기관			
		개소	주요 기업	개소	주요 단체(기관)
계	406개소 <49회>	267+		139+	
본부	8.24 <1회>	11	이마트, 신한은행, 신세계 등	3	대한상의, 경총 등
서울청	9.29~10.12 <7회>	38	한국방송공사, 미래에셋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 아시아나항공 등	26	서울상의 상공회, 중견기업연합회, G밸리경영자협회 등
충부청	9.9~10.12 <6회>	33	인천항만공사, 인천환경공단, 키움저축은행, 일산병원 등	4	인천경총, 경기북부상의 등
경기 지청	9.20~10.14 <5회>	27	삼성전자, 삼립식품, 코오롱제약, 한국마사회 등	19	경기경총, 수원상의, 중기기술혁신협회 등
강원 지청	9.20~10.10 <5회>	25	한국고용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동해요양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9	강원경총, 춘천상의, 강원중기중앙회 등
부산청	9.20~10.11 <8회>	55	부산은행, 부산롯데호텔, 두산중공업, 온종합병원 등	19	부산경총, 부산상의, 부울경중기중앙회 등
대구청	9.23~10.14 <6회>	25	대구백화점, 코오롱인더스트리, 포스코ICT, 한국가스공사 등	20	일가정양립지원재단, 대구상의, 대구경총 등
광주청	9.29~10.12 <6회>	27	현대삼호중공업, 한국전력공사, 이스타포트, 나은요양병원 등	29	광주시, 광주상의·경총, 중기중앙회전북본부 등
대전청	9.29~10.18 <5회>	26	(주)케이티씨에스, 동아오츠카(주), 해태제과식품(주), (주)심택 등	10	대전충남경총, 청주상의, 충북경총, 대전YWCA 등

##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장 마련!”

- 2016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9월 30일(금) 오후 2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소재)에서 중앙행정기관 소관 위원회(이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여성위원 21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 자리는 정부 국정과제인 ‘미래여성인재 10만 양성’과 관련해 정부위원회를 비롯한 공공부문 여성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의 지속적인 여성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직 여성위원들과 지난해부터 간담회를 정례화했다.
-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첫 간담회 개최 : 2015.11.16.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인재디비(DB)」를 통해 위촉되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이 참석하여,
  - 여성이 중간관리자 단계에서 의사결정직으로 성장해 온 과정에서 겪었던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 참석한 정부위원회 위원들은 “유연근무, 재택근무 같은 일·가정양립 제도들이 현장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며,
  - “조직문화 개선과 더불어 여성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전기·안전·소방 등)에도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와 관련하여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여성고용률 제고, 공공부문 여성관리자 참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 “여성인재들이 공공부문에 진출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 여성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17년까지 여성인재풀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성인재풀 등재자들을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공기관 임원 등 다양한 공공부문에 추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6년 4월말 기준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36.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 4급이상 여성공무원은 2013년 9.9%에서 2015년 12.0%, 공공기관 여성관리자는 2013년 13.0%에서 2015년 16.4%로 확대되었다.

- 붙임 1.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 개최 계획  
 2.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 참석자 현황

□ **목 적**

- 정책결정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 차별적 의식과 관행 등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의사결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정부위원회 현직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국가 인재로서의 여성리더의 역할 인식 및 사회적 기여방안 모색

□ **일시·장소** : '16.9.30(금), 14:00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참석대상** : 정부위원회 현직 여성위원(21명)

□ **주요내용**

- (특 강) 공공부문 메커니즘과 여성 리더의 역할
- (간담회) 정부위원회 활동 사례 등 공유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사전행사	14:00 ~ 15:00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부문 메커니즘과 여성리더의 역할</li> <li>- 국가와 사회, 그리고 여성리더</li> <li>* [특강] 민경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li> </ul>	
간담회	15:00 ~ 16:00	6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li> <li>- 정부위원회 활동 애로사항 및 여성참여 확대방안 논의</li> </ul>	
마무리	16:00 ~ 16:10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및 기념촬영</li> </ul>	

**붙임2****정부위원회 여성위원 간담회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1	김귀자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2	김미량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교수
3	김설주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연구교수
4	김자경	한국수력원자력(주) 엔지니어링처 차장
5	김진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소속 (前) 경찰병원 임상병리사
6	김영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7	김영화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8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9	류은경	의료법인 자인메디병원 이사장
10	명소영	(주) 그린폴라리스 대표
11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육지원처장
12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13	오덕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본부장
14	유세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15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16	이옥화	(주) 에이치오엠건축사사무소 대표
17	임영애	아주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18	장윤금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9	최령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장
20	황연주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21	허윤경	(주) 상민이엔지 대표이사

※ 연번은 참석자 성명의 가나다순

## 국가공간정보 “민간의 자유로운 활용 길 열려~” - 토지가격 등 융복합 정보 5.3억 건 민간에 무상 제공 -

-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서 활용성이 가장 높은 국가공간정보가 조기 개방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정책에 따른 데이터빅뱅\*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올해 연말까지 개방하기로 계획한 22종의 데이터 중 국민 편의 증진과 민간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활용도가 높은 10종을 9월 말까지 조기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데이터빅뱅)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 전략부터 품질진단, 데이터 구축까지 패키지로 공개하는 프로젝트
- 이번에 개방되는 정보는 부동산 가격 및 소유정보와 면적에 관한 것으로 공간정보(토지, 건물) 기반으로 융·복합한 지도 서비스이다.
- 또한, 민간·산업계에서 자유롭게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파일 데이터 및 공개API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이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 (파일데이터)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정보 등 행정정보를 원문파일(csv) 형태로 제공하여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공·분석 가능
  - \*\* (오픈API) 국가공간정보 갱신주기별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합·제공하여 누구나 최신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이번 개방을 통해 소상공인 및 창업예정자들은 부동산 관련 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상권정보, 시장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은 부동산 매물정보, 경매, 공매 정보 등을 지도 위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 특히, 공개되는 정보들은 포털, 통신사,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서 부동산 개발 지원, 길안내 및 지도서비스의 갱신이나 최신 정보 구축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부동산 거래/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경우 민·형사상 분쟁 및 중개사고 감소와 부동산·토지정보 열람·발급 수수료 비용(약 1,275억 원/년) 절감 등 법적·경제적 효과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 \* 참고3. 국가공간정보 개방에 따른 정량적 효과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산업계의 창의적 활용과 정보 융합을 통한 신규 먹거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12종의 공간정보를 추가 개방하고,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활용가치가 높고 파급력 있는 핵심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1. 추진 개요

### □ 추진 배경

-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중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국가공간정보 개방수요 반영 및 관련 융·복합 서비스 구축을 통한 민간 활용 활성화
  - \* (국가공간정보) 부동산가격정보 및 통계정보,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토지이용 계획정보 등 부동산 관련 속성정보와 공간정보
-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계획』 36개 분야 선정( '14.12월), 국가공간정보는 11대 핵심 개방 추진 대상( '16.2월)으로 선정(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 사업 목적

-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의 개방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공 및 민간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며, 개방데이터에 대한 이용활성화 방안을 수립
- 민간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있는 부동산가격정보를 포함한 국가공간정보 22종에 대한 개방 데이터 셋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 2. 추진 계획

- (개방포털) 국가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하여 민간 및 산업계에서 쉽게 활용토록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개방
  - \* 행자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http://www.data.go.kr)) / 우리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go.kr](http://www.nsd.go.kr))
- (개방포맷) 사용자가 상용 소프트웨어(GIS SW, 엑셀 등)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가공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 포맷으로 데이터 제공

- (개방항목) 토지(4), 건물(4), 부동산가격(4) 및 부동산 통계정보(10) 22종을 공간정보 기반 융·복합 데이터 셋으로 구축하여 실시간 서비스

국가공간정보(22종)				
목록	종수	개방데이터명	개방일정	구분
토지 정보	4종	토지이용계획	16.9월	공간
		토지이동연역정보	16.12월	
		도세심정보	16.9월	
		소유정보	16.9월	
건물 정보	4종	GIS건물정보일반	16.12월	
		GIS건물정보집합	16.12월	
		부동산중개업	16.9월	
		부동산개발업	16.9월	
부동산 가격 정보	4종	개별공시지가정보	16.9월	
		공시지가표준지	16.9월	
		공동주택가격정보	16.12월	
		개별주택가격정보	16.12월	
부동산 통계 정보	10종	국토지역별연형, 지역별 토지가격연형 국토소유연령별 연형	16.9월	속성
		토지지역별연형 토지소유자수연형, 토지소유세대수연형 연령대별 토지소유연형, 거주지역 토지소유연형 개별공시지가 기본통계, 외국인 부동산 취득연형	16.12월	

- (개방방식) 개인 및 기업에서 손쉽게 정보를 취득하여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다운로드\*, 오픈API\*\* 방식으로 개방

\* (원문다운로드) 부동산가격정보 등 행정정보를 원문파일(csv) 형태로 제공하여 상용프로그램(엑셀)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가공·분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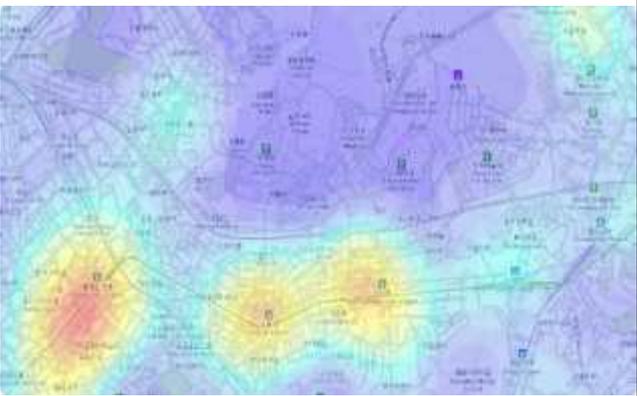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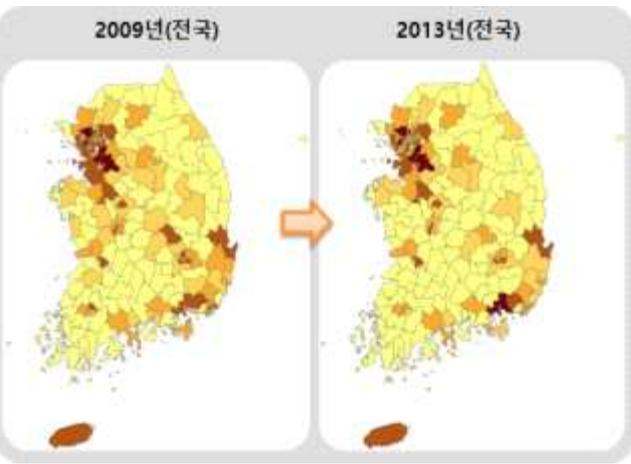
\*\* (오픈API) 국가공간정보 갱신주기별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합·제공하여 누구나 최신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3. 기대효과

- 국토, 국가 공간정보 분야 대용량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신성장사업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국가중점데이터를 쉽게 활용(OpenAPI, 무료 다운로드 등) 함으로써
- 종전 오프라인 공간정보 제공방식을 실시간 온라인 제공 체계로 변경하여 정보의 최신성 확보(개방 데이터 셋 실시간 제공)

**참고 2**

**국가공간정보 활용 사례**

	
<p>개별주택 가격 지도</p>	<p>공시지가 활용 추이 분석</p>
	
<p>울산광역시 남구 CCTV 분포 정보</p>	<p>소상공인 업종 분포도</p>
	
<p>관광지 외국인 게스트 하우스 정보 제공</p>	<p>전국 인구분포 분석</p>

○ 산출 근거

\* 부동산 정보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개방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1,000억(약 5%) 비용절감 예상

(참조 : 부동산 정보 시장 스타트업 기존업체 모바일 경쟁 후끈, 전자신문, 2016.01.12.)

\*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공제금 지급현황

- 2014년 중개사고 176건, 60억원(사고원인 중 대상물 확인·설명사고가 49% 차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경영공시, 2016)

\* 부동산 관련 민형사상 분쟁 연평균 27,251건

(법무연수원(2015) 2014 범죄백서, 법원행정처(2015) 2014 사법연감 및 과년도 발행본)

\* 신규 비즈니스 사업으로 부동산 정보확인 서비스 제공 시장규모 약 1,275억

- 수식 : 정보조회 수수료 \* ( 주택거래량 + 토지거래량 ) \* 정보조회건수 \* 물건조회자  
 = 500(원) \* ( 2,015,827(건) + 3,086,529(건) ) \* 5(건) \* 20(명)  
 = 127,558,900,000(원)  
 = 1,275억원

- 산출근거

· 정보조회 수수료 : 500원(건당)

(부동산종합정보관련 개별 공부 인터넷발급 수수료 평균 금액)

· 물건(부동산, 토지는 필지규모) :

주택거래량 2,015,827건, 토지거래량(필지) 3,086,529 필지

(한국감정원, 2015년도 통계정보)

· 정보조회건수 : 5건 (부동산 및 토지거래 시 유사물건 등에 대한 최소 정보 조회수)

· 물건에 관심을 갖고 조회하는 사람(예상) : 20명

## 해수부 R&D기반 최초 해양바이오 벤처기업 탄생

- '네이처글루텍', 홍합 기반 의료용 생체접착제 상용화 첫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9월 30일 11시에 해수부가 연구개발을 지원한 홍합 기반 생체접착제 기술로 탄생한 첫 벤처기업인 '네이처글루텍'의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하여 포스텍 총장, 포스코, 의료계,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는 국정과제로 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해양수산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에 1999년부터 약 2천억 원을 투자해왔으며,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의 대표 사례인 '홍합 기반 생체접착제' 연구에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4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처글루텍은 해수부의 해양수산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독자적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이 직접 창업에 나선 첫 사례로서, 차형준 교수 연구진은 홍합 접착단백질 원천소재 및 세계 최초 홍합 접착단백질의 대량생산 기술 개발 등의 연구 성과를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 학술지('Biomaterials, Biomacromolecules, Angewandte Chemie' 등)에 다수 게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 아이디어마켓 플레이스 최우수상, 도전 K-스타트업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동 기술은 우수한 생체적합성, 수중에서의 높은 접착력, 대량생산을 통한 경제성 확보 등으로 기존 생체접착제 및 봉합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합 접착단백질 기반 생체접착제가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할 경우, 연간 140억 달러(한화 15조원, Med Market Diligence)에 이르는 세계 의료 봉합·접합 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석 장관은 “네이처글루텍의 창업은 우리 해양생명공학의 우수한 기술력과 미래 신산업으로서의 해양바이오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라면서, “제2, 제3의 해양바이오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크게 번창하여 멋진 성공사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의료용 생체접착제를 직접 시연 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둘러본 후 직원과 연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정과제인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 신소재 개발에 1,300여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 추진 배경

- 해수부 해양생명공학기술(R&D) 기반으로 창업한 최초의 해양바이오 기업인 (주)네이처글루텍의 준공 축하 및 격려

## □ 행사 개요

- 일 시 : 2016. 9. 30(금) 11:00~13:00
- 장 소 : (주)네이처글루텍(서울 금천구)
- 참석자 : 해수부 장관, 해양환경정책관, 포항공과대학 총장,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 등
- 주요 내용 : 기업 현판식, 주요 기술 및 사업계획 설명, 생체접착제 시제품 시연 및 생산시설 시찰, 오찬간담회

## □ 행사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	○ 현판식	네이처글루텍 (에이스테크노타워 7층)
11:10 ~ 11:20	10'	○ 기술 및 사업계획 설명	차형준·김명호
11:20 ~ 11:30	10'	○ 생체접착제 시연	장관 외
11:30 ~ 11:40	10'	○ 생산시설 시찰	
11:50 ~ 13:00	70'	○ 오찬 간담회	

## 참고2

## 의료용 생체접착제란?

□ 의료용 생체접착제 : 손상된 조직에 도포하여 봉합, 접합하는 의료 소재

봉합사	스테인플	생체접착제
		
		
상처부위 오염, 누액, 봉합사 제거 필요, 흉터 등 문제점 상존		상처부위 오염 방지, 시술 간편, 제거시술 불필요, 흉터 최소화

□ 기존 생체접착제의 문제점

- 기존의 생체접착제는 피부와 같은 연조직 접착에 사용이 한정 되고, '접착력'과 '생체적합성'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함

### 기존 의료용 생체접착제 제품 사례

#### 시아노아크릴계 접착제

- 피부상처 봉합용 순간접착제
- 접착력은 크나 독성이 있음 (경피만 사용가능)



※ 시아노아크릴계: 공업용 순간접착제 성분

#### 피브린계 접착제

- 혈액내 응고성분의 지혈제
- 독성은 없으나 접착력 낮음 (지혈제로 승인)



※ 피브린계: 혈액 단백질 성분

□ 기술개발 경위

- 해수부의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한 홍합 유래 생체 접착제의 유전학적 대량생산 및 의료용 접착제 제형화 기술 개발

\* 해양유용신물질개발사업('02~'07, 8억원, 차형준)

해양섬유복합소재및바이오플라스틱소재기술개발('10~'19, 460억원, 차형준)

- 벤처기업 (주)네이처글루텍 창업('15.9) 및 기술이전('15.10)
-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16'에서 최우수상인 국무 총리상 수상('16.8.26. 6,545개 팀 참가)

□ 미생물 배양시스템을 통한 홍합접착단백질 대량생산기술 개발

- (문제) 기존 자연추출 방식을 통한 홍합접착제 생산의 비경제성

\* 홍합 1만마리 ⇨ 단백질1g 추출 ⇨ 1억원 소요

- (해결) 미생물배양을 통한 홍합접착단백질 대량양산기술 개발



□ 홍합접착단백질 생산공정



□ '도전! K-스타트업 2016' 최우수상 수상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메디컬 생체접착제**  
Mussel adhesive protein-based medical bioadhesives

(주)네이처글루텍 | 김명호, 차형준



홍합 자연물 접착제

피부상처, 뼈 조직, 장기 접합(수중접합)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인체 안정성도 검증 완료된 현존 최고의 생체 접착제

말할 수 없는  
고통에서의 해방

신속한 치료와  
흉터의 최소화

골질의 빠른 회복과  
생활의 불편함 최소화

DID YOU WORRY?

우리 아이를 보면서 흉터가 남는 건 아닐지  
왜 빨리 낫지는 않는지 걱정하셨습니까?



DID YOU KNOW?

전 세계의 200만명의 여성들은 요루(尿瘻)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매년 5~10만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합니다.



**Fix LIGHT**  
Rapidly Light Activated Surgical Protein Glue  
Inspired by Mussel Adhesion

- 홍합단백질이 주재료인 접착제
- 청색광을 접착제 도입부에 조사하면 30초 정도의 시간에 가교됨
- 피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순간접착이 가능한 생체접착제

Water-Immiscible Fluid BioAdhesives  
**BONE FIX**

- 주재료인 홍합단백질과 인체내 다당류 성분인 히알론산이 혼합된 접착제
- 물속에서 분산되지 않고 사용부위에 정확하게 도입할수 있음
- 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중접착이 가능한 생체접착제

주요성과

-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선정(3월)
- 생물학적 안전성 공인인증 완료(6월)
- IDV, IBKC, PVCC 투자(28억원, 7월)
- 벤처기업 인증(8월)
- GMP 생산시설 공사 착수(9월 완료 예정)

기업목표

꼭 필요한 그러나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생체접착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상처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수술을 통해 건강을 삶을 찾아드리고 상처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들어 자신감 있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 참고4

## 홍합접착단백질 기반 메디컬 생체접착제

### □ 창엽 아이템 - “경조직·연조직 메디컬 생체접착제”

- 연조직 접착제(Fix Light) : 피부 접합용 생체접착제
  - 피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순간접착 가능(봉합사, 스테이플 대체 가능)
  - 선풍을 비추면 30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접착 가능
- 경조직 접착제(Bone Fix) : 골절 접합용 생체접착제
  - 뼈 접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중접착이 가능
  - 물속에서 분산되지 않고 대상 부위에 정확히 도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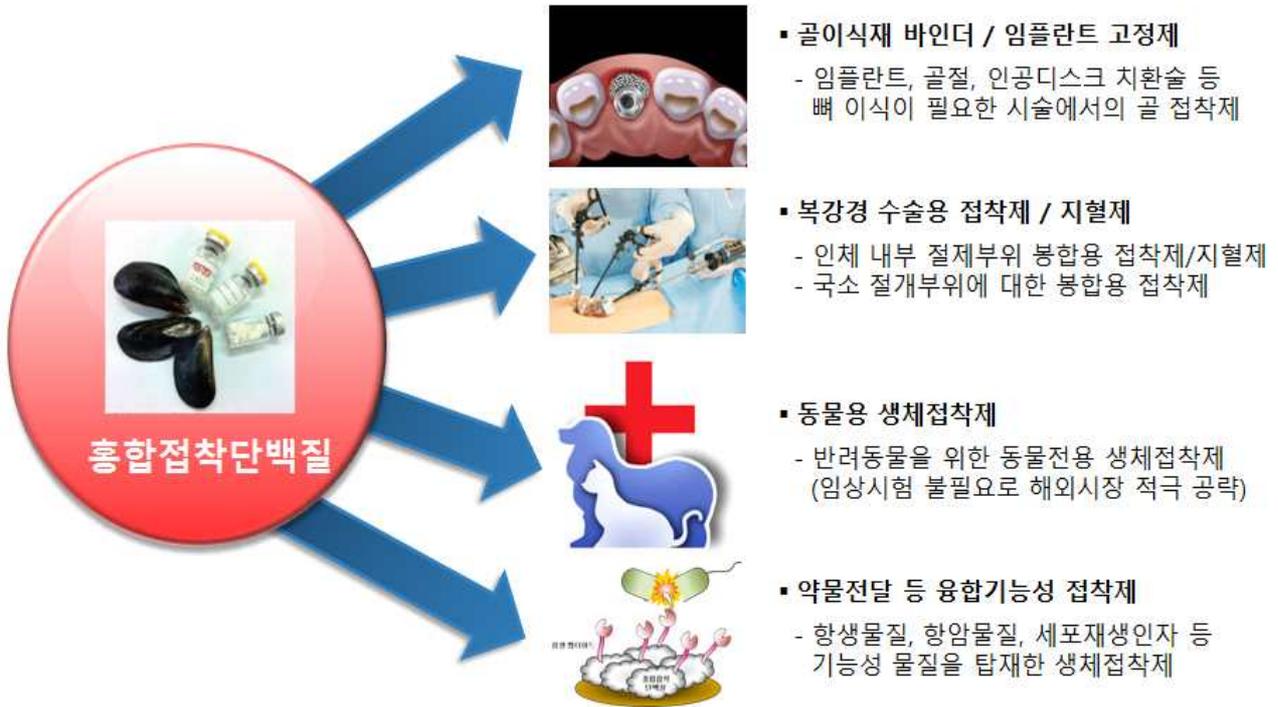
◀ (좌) FIX LIGHT  
(연조직 접착제)

◀ (우) BONE FIX  
(경조직 접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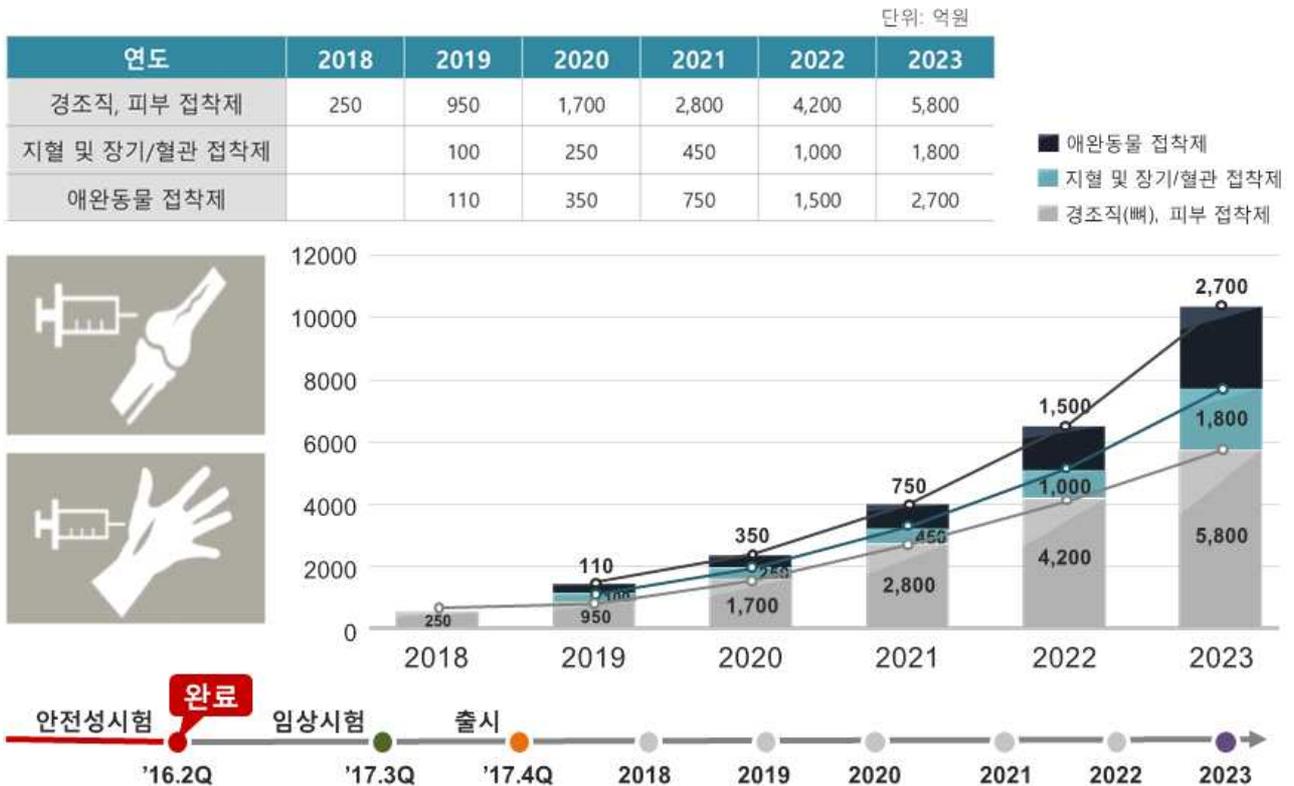
### □ 생체접착제 성능 비교

구 분		홍합단백질 생체접착제		타 제품	
		경조직접착제	연조직접착제	시아노아크릴계 제품	피브린글루계 제품
성 능	접착력	◎	○	◎	△
	수중접착	◎	○	×	×
	유연성	○	○	×	○
	접착후유지력	◎	◎	×	◎
생체적합성	세포투과성	○	○	×	○
	분해흡수성	◎	◎	△	◎
	무독성	◎	◎	×	○
경 제 성	대량양산	◎	◎	◎	×

□ **홍합접착단백질 소재 기반 응용 가능 분야**



□ **예상매출액**



**참고5**

**네이처글루텍 대표이사 약력**

성명	김명호		
생년(나이)	1965년(51세)		
업무	• (주)네이처글루텍 임상허가 획득 및 마케팅 총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 석·박사</li> <li>•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 학사</li> </ul>		
주요 경력	2007-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메디칼리서치(정앤파트너스) 이사 역임</li> <li>- 의료기기 창업 컨설팅 약 20건</li> <li>- 의료기기 허가취득 약 100건</li> <li>- 의료기기 생산설비 GMP 승인 약 100건</li> </ul>	
	2000-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네오바이오텍 창업, 대표이사</li> <li>* 치과용 임플란트, '14년 매출 500억</li> </ul>	

성명	차형준		
생년(나이)	1968년(48세)		
업무	• (주)네이처글루텍 기술분야 총괄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석·박사</li> <li>•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li> </ul>		
주요 경력	1999-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석좌교수</li> <li>* 융합접착단백질 생체접착제 관련 국내외 논문 50편, 특허 60여건</li> </ul>	
	1996-1999	• University of Maryland Post-Doc/ 연구조교수	
	1995-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IST 유전공학 연구소 연구원</li> <li>•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원</li> </ul>	